

대한민국 독립 연구 메커니즘(IRM)

2014~2015년 진행 보고서

목차

대한민국 요약 보고서	2
1. 한국의 OGP 참여	8
2. 실천 계획 개발	11
3. 실천 계획 실행	16
4. 실천 계획 내용 분석	17
1. 공공 서비스 개선	22
a: 민관 협력 증진	22
b: 맞춤 서비스 제공	26
2. 행정 청렴도 개선	30
c: 정보 공개 증진	30
d: 공공 서비스 윤리 증진	35
3.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39
e: 민간 부문의 공공 데이터 활용 촉진	39
절차: 자체 평가	46
6. 현재 한국 상황	49
7. 제반 권고 사항	55
8. 방법론 및 출처	57

대한민국 요약 보고서

독립 연구 메커니즘(IRM) 2014~2015년 진행 보고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OGP 참여 여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 한국은 개방성 관련 전문가와 연계하여, 부패, 온라인 참여 등 기본적인 오픈 거버넌스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현 전자 정부를 넘어 진취적 자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은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약을 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이다.

대한민국은 2011년 9월 OGP 공식 회원국이 됐다.

대한민국 행정자치부는 OGP 활동 조정을 담당하는 주관 기관이며 전자 정부 계획을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 제반의 조정도 담당하고 있다.

국가 실천 계획에 제시된 5개 공약 중 3개 공약의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명시되지 않아 공약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평가할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OGP 절차(OGP PROCESS)

OGP 회원국은 절차에 따라 실천 계획 개발 및 실행 기간 내 협의를 거친다.

1차 실천 계획 기간과 마찬가지로 협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협의했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실천 계획 개발 및 실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시민 참여가 이뤄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투명성 의제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OGP 공약 및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인식 제고 활동의 수행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OGP 실천 계획에 필요한 조언을 수집하기 위해 전자 거버넌스와 오픈 데이터에 중점을 둔 '정부 3.0' 프로그램 기존 포럼을 활용했다고 보고했다. 기존 국가오픈데이터포럼도 오픈 데이터와 관련하여 일부 관계자와의 협의 진행에 활용됐다. 의사록이 공개돼 있지 않아 OGP 공약 중 어느 공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참석한 이해관계자가 어느 조직인지, 협의가 일반에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실행 기간 동안 행정자치부는 오픈 데이터 관련 공약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과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기

가입연도: 2011
공약 수: 5

진척 수준별 공약 수:

완료: 5개 중 0개
상당 부분 완료: 5개 중 1개
제한됨: 5개 중 3개
미착수: 5개 중 1개

소요 기간:

일정 준수: 5개 중 1개

공약 주안점별 공약 수:

정보 접근성: 5개 중 4개
시민 참여도: 5개 중 5개
공공 책임성: 5개 중 2개
관련 기술: 5개 중 1개

평가 요소별 공약 수:

OGP 가치와
명확한 연계: 5개 중 5개
높은 비용 가능성: 5개 중 0개
완료 또는
상당 부분 완료: 5개 중 1개
3가지 전부 해당(⊕): 5개 중 0개

OGP 지원 부처가 2015년 9월 30일 중간 점검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문서는 한국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공약의 실행

OGP 참여의 일환으로 회원국은 2년 단위로 실천 계획과 이에 대한 공약을 수립한다. 한국 실천 계획은 5개의 공약을 담고 있다. 다음 표에서 공약별로 진척 수준, 변용 가능성, 한국의 자체 일정 준수 여부, OGP 실천 계획에 따른 공약의 향후 주요 실천 단계 등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IRM 조사는 별표된 공약을 포함한다. 별표된 공약은 서술한 바와 같이 변용 가능성 또는 완료 여부 등이 측정 가능하며 OGP 가치와 명확한 관련을 지닌다. 한국 실천 계획의 공약 중에는 별표된 공약이 없다.

OGP 공약 모델 기대치를 높이하고자 2015년 초 별표 기준을 업데이트했다. 또한 위 목록에 제시된 기준과 더불어 이전 기준으로 변용 가능성이 보통인 공약을 포함했다. 이전 기준 하에 한국은 1개 공약(공약 3.E)에서 별표를 받았다. 자세한 정보는

(www.opengovpartnership.org/node/59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공약 진행 평가

간략한 공약 명	변용 가능성				완료 수준				일정 준수 여부
	이전 정	이전 진	배 과	이 변	수 미 진	제한 된	명 확 한 과 관 련 성		
주제 1: 공공 서비스 개선									
1a. 민관 협력 증진									지연
1. 협의 채널 구축									지연
2. 민관 협력 사례									지연
3. 온라인 논의 플랫폼									지연
4. 국책 사업의 온라인 논의									지연
1b. 맞춤 서비스 제공									지연
1. 50대 주력 사업 선정 및 부양									지연
2. 주력 사업 개발									지연
3. 공공 서비스 신설									지연
주제 2: 행정 청렴도 개선									
2c. 행정 청렴도									지연

1. 정보 공개 증진									지연
2. 시민 감시 단체 구성									지연
3. 공개할 데이터 목록 발표									지연
2d. 행정 청렴도: 공공 서비스 윤리 증진									지연
1. 계획 개발 및 감사 실행									지연
2. 자문단 회의 개최									지연
3. 온라인 재산 공개 가이드라인									지연
4. 퇴임 공직자 윤리 감사 온라인 게시									지연
주제 3: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3e. 민간 부문의 공공 데이터 활용 촉진 - 이 공약은 2016년까지 정보 액세스를 증대하고 오픈 데이터 비율을 16.1%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정 준수
1. 2016년까지 정보 공개 증대									일정 준수
2. 공공 데이터 우선순위 파악									일정 준수
3. 공개 대책 팀과 협의									일정 준수
4. 모범 사례 확대 적용									일정 준수

표 2: 공약 진행 요약

공약명	실시 결과
주제 1: 공공 서비스 개선	
1a. 민관 협력 증진 - OGP 가치 연관성: 명확 - 변용 가능성: 적음 - 완료 여부: 제한됨	이 공약은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수립됐다. 국민신문고 및 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회의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 활용을 통한 협의 채널 구축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공약 이전에 구축된 여러 전자정부 포럼이 존속되고 있으나 공약의 의의와 뚜렷한 연관이 없다. 검토 기간 동안 국민신문고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 협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공약은 형성 및 실행에 있어 정부의 현행 관련 정책을 넘어서지 않는다. 민원 처리 일정을 추적하는 기준 지표 등 국민신문고 플랫폼의 효율성 모니터링을 위한 감사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마일스톤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1b. 맞춤 서비스 제공	이 공약은 시민과의 협의 부문에서 5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개발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개발 및 확대를

• OGP 가치 연관성: 명확 • 변용 가능성: 적음 • 완료 여부: 제한됨	도모한다. 민생 요구 해결을 위한 20개 사업만 공개 및 심화 개발되었으므로 완료 수준은 제한적이다. 또한 새로 시작된 공공 서비스는 1개에 불과하다. 이해관계자들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 대상 집단을 위해 이미 양질의 “맞춤”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공약은 기존 정부 서비스의 확대이므로 변용 가능성이 적다. 정부는 더욱 구체적인 공약으로 열린 정부 메커니즘을 사용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시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제 2: 행정 청렴도 개선	
2c. 정보 공개 증진 • OGP 가치 연관성: 명확 • 변용 가능성: 보통 • 완료 여부: 제한됨	이 공약은 연간 공개되는 문서 수를 증대하고, 시민 감시 단체를 구성하고 ‘10대 주요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정보 공개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 기간 동안 공개된 데이터 규모 정보가 공개적으로 제공돼 있지 않아 완료 수준은 제한적이다. 정부 문서의 대규모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이 공약은 정부가 공개할 데이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변용성이 보통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10대 주요 영역’을 정하고 공약 진척도에 대한 공개 모니터링을 추진해야 한다.
2d. 공공 서비스 윤리 증진 • OGP 가치 연관성: 명확 • 변용 가능성: 적음 • 완료 여부: 미착수	이 공약은 퇴임 공직자 재임용 감시의 개선, 특히 퇴임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고액 급여를 받는 민간 고위직을 차지하는 ‘회전문 인사’ 문제 완화를 도모한다. 완료 수준은 미착수로 평가됐다. 검사 계획, 자문단 회의, 온라인 자산 공개 지침 발간 및 검사 결과 등 어떠한 마일스톤에 대해서도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정부 관행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다. 정부는 투명한 절차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감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발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화이트칼라범죄 관련 법적 처벌 규정을 보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3: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3e. 민간 부문의 공공 데이터 활용 촉진 • OGP 가치 연관성: 명확 • 비용 가능성: 보통 • 완료 여부: 상당 부분 완료	이 공약은 정부의 기존 '정부 3.0' 비전을 주로 사용한다. 이 공약은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세트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의 활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 기간 중 많은 데이터세트가 공개됐다. 2014년 여름부터 시행된 '정부 3.0'의 데이터 공개 계획은 혁신적이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데이터의 속성이 더욱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진척도 추적의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세트의 수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투명성 프로그램을 통합하고자 할 경우, 정보 공개 청구 처리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	--

제안

한국은 정보 공개 및 오픈 데이터 부문 공약 구체화에서 진전을 보였다. 특히 오픈 데이터 공약 실행 기간 중 시민 참여 기회 증진 부문의 공약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더 많은 정부 부처 및 정책 결정 과정에 공공 책임성 증진 정책과 시민 참여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도입함으로써 OGP만의 가치를 염두에 둔 공약을 포함해 더 많은 공약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검열 및 사찰, 질병 전파에 대한 공공 보건 정보, 정부의 민간 부문 개입 시 투명성을 다루는 공약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이 보고서에 서술된 문제점과 조사결과에 기반해 주요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5대 '스마트' 권고사항	
1.	OGP를 위한 관계자 포럼 개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괄: 국가 실천 계획의 초안 및 실행 단계에 이러한 활동을 동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기업 및 기타 다양한 영역의 오픈 데이터 관계자 및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을 포함해 이해관계자를 구성해야 한다.
2.	한국 열린 정부 핵심 과제 파악 및 처리: 정부 3.0 공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영역을 적절히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1) 명예훼손법, 국가보안법, 국가 기밀 및 국정원의 향후 방향 2) 정보 자유법상 정보 공개에 대한 모호한 규정 3) 참여,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OGP 가치에 대응하는 전자 정부 프로그램
3.	IRM 절차 참여: 일반적인 OGP 회원 지침을 준수하며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4.	더욱 진취적이고 측정 가능한 공약 수립: 현행 정책보다 더욱 진취적인 공약을 수립한다.
5.	국가별 실천 계획 명시: 한국 및 국가적 이해관계자 간에 배포 및 홍보할 목적으로 실천 계획을 명시한다.

자격요건: OGP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열린 정부의 핵심 분야와 관련한 최소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분야별 진단에는 외부 지표가 사용된다. 자세한 정보는 본 보고서 말미의 9장 자격 요건 또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opengovpartnership.org/how-it-works/eligibility-criteri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프리 케인(Geoffrey Cain)은 한국 담당 독립 연구원이다.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신기술을 도입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공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국의 공약 수립 및 실천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도모하며 책임성을 증진하는 것이 IRM의 목적이다.



1. 한국의 OGP 참여

I.1: OGP 참여사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은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신기술을 도입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국제 이니셔티브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 OGP는 각국 정부, 시민사회단체, 민간 부문 사이에 대화와 교류가 오가도록 국제 포럼을 개최해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기업 등 이 세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열린 정부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OGP의 미션과 원칙을 지지한다.

대한민국은 한덕수 당시 주미 대사가 한국의 가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1년 9월 OGP 공식 회원국이 됐다.

OGP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부에서는 열린 정부의 핵심 요소인 정부 반응성, 시민 참여 강화, 부패 척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열린 정부 공약 한가지를 실천했음을 보여야 한다. OGP 이외의 기관이 작성한 지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점수를 매겨 각 단계별 진전을 확인한다. 한국은 각 기준별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가입 당시 한국은 정부 예산 투명성(4점 만점 중 4점)¹ 과 정보법 접근성,² 선출직 또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³ 이코노미스트지 산하의 EIU의 민주화 지수 중 '시민의 자유' 부분에서 10점 만점 중 8.82점을 기록했다.⁴

OGP의 회원국은 OGP 국가별 실천 계획을 수립해 가입 후 첫 2년 동안 공약을 구체화해야 한다. 실천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는 우선 열린 정부 전략과 실시 중인 사업을 비롯해 OGP '5대 과제'에 관련된 현행 사업을 공유해야 한다 (4장의 5대 과제 영역 목록 참조). 5대 과제와 관련해 현재의 관행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인 OGP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 OGP 공약은 현행 사업을 보완할 수도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중간 단계를 신설하거나 현행 계획에 없는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은 2012년 7월 첫 국가 실천 계획을 시작해 2014년 6월 말까지 시행했다. 담당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은 OGP 일정에 따라 2014년 1월 시작한 실천 계획 초안을 개정하거나 2014년 6월 중순까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제2차 국가 실천 계획은 2014년 7월 시작됐다.

I.2: 기관 기본 배경

대한민국 행정자치부는 OGP 활동 조정을 담당하는 주관 기관이며 제2차 실천 계획 기간 중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MOGAHA), 행정자치부(MOI로 영문명 변경)로 두 차례 개명됐다. 행정자치부는 국내 행정, 정부 기관, 인사 관리, 전자정부, 재난 안전 등 국내 공공 서비스의 조정 일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금융,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담당한다.

국가별 실천 계획에는 5개 공약 중 3개 공약 수행 담당 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다. IRM 절차 중 상당 기간 동안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해당 정보 및 관련 정보를 IRM 연구원에게 제공하거나 회의를 수락하지 않았다.

I.3: 방법론 정보

OGP 요건에 따라 OGP 독립 보고 메커니즘(IRM)은 경험이 풍부한 현지 독립 연구원과 협업해 한국의 첫 실천 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한국에서 IRM은 정부 거버넌스, 언론, 인터넷 검열 전문가인 Asia Pacific Research (APR) CEO 제프리 케인과 협력했으며 제프리 케인이 본 진행 보고서를 작성했다. 각 OGP 회원국의 향후 공약 수립의 진행과 실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IRM의 목적이다. APR은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정부기관 관계자 및 여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했다. OGP 직원 및 전문가 패널이 본 보고서를 검토했다.

본 보고서는 첫 국가 실천 계획 개발 및 실행을 다룬 이전의 OGP 실적 검토 결과인 '대한민국 2012-2013 진행 보고서'의 후속 보고서다.

APR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서울에서, 그리고 웨비나 형태로 2회의 포럼을 개최했으며, 2회 모두 표적집단 모델에 의거해 실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관계자 포럼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웨비나로 열린 2차 포럼에는 일부 관련 공직자가 참석했다. 2차 포럼 이전 기간과 조사 기간 내 상당 기간 동안 관계자와 대면 회의 또는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행 기관 목록이 없어 각 실행 기관의 관계자와 접촉할 수 없었다. 본 보고서 초안 작성 시점에 정부는 검토 기간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10월 1일, 연구원에게 2015년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공했다.

OGP IRM 지원팀은 국가 담당 연구원과 함께 2015년 12월 1일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한국 정부에 공약 완료에 대한 보충 정보를 요청했다. OGP IRM 지원팀과 연구원은 2015년 12월 7일 정보를 전달받았다.

관계자 포럼 요약, 면담 목록 및 자세한 설명은 8장 방법론 및 출처에 수록했다.

¹ Open Budget Partnership, *Open Budgets Change Lives* (Washington, DC: Open Budget Partnership, 2012). http://internationalbudget.org/wp-content/uploads/2011/06/2010_Full_Report-English.pdf.

² <http://www.right2info.org/laws/constitutional-provisions-laws-and-regulations#section-108>.

³ 3 Simeon Djankov,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and Andrei Shleifer, "Disclosure by Politicians" (Tuck School of Business Working Paper 2009-60, 2009). <http://bit.ly/19nDEfK>;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ypes of Information Decision Makers Are Required to Formally Disclose, and Level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at a Glance 2009*, (OECD, 2009). <http://bit.ly/13vGtqS>; Ricard Messick, "Income and Asset Disclosure by World Bank Client Countrie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http://bit.ly/1clokyf>.

⁴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0: Democracy in Retreat" (London: Economist, 2010). <http://bit.ly/eLC1rE>에서 열람 가능.

2. 실천 계획 개발

OGP 회원국은 OGP 실천 계획 설정 기간 동안 일련의 협의 과정을 따라야 한다. OGP 거버넌스 규약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협의 기간 이전에 공식 협의 절차와 일정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최소한 온라인으로는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 등의 국내 단체들과 널리 협의하여 다양한 관점을 모색해야 하며, 공개 협의와 모든 개인들의 견해를 요약해 온라인으로 게시해야 한다.
- OGP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써 협의 단계에서 시민의 보다 많은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 사전 공지 등 다양한 방법(온라인 및 대면 협의)으로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아래 다섯 번째 요건은 협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OGP 거버넌스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본 요건에 대해서는 '3장. 절차 2: 실행 중 정기 협의'에서 다루도록 한다.

- 회원국은 OGP 실행에 관한 다자간 협의를 위한 포럼을 개설해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기존의 포럼을 활용하거나 새 포럼을 조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나, 실행 이전 단계 및 실행 단계 기간 내 협의의 증빙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고자 아래 표1에 설명했다.

표 1: 실천 계획 협의 절차

실천 계획 단계	OGP 절차 요건(OGP 거버넌스 규약 항목)	정부의 요건 충족 여부
계획 수립	협의 이전에 일정 및 절차를 제공했는가?	불명
	일정을 온라인으로 게시했는가?	불명
	일정을 다른 창구를 통해 제공했는가?	불명
	일정 링크를 기재하시오.	없음(없음)
	협의를 사전에 공고했는가?	불명
	사전 공고는 일정보다 며칠 앞서 이뤄졌는가?	0

	공고가 적절했는가?	불명
	정부가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했는가?	불명
	인식 제고 활동 링크를 기재하시오.	없음(없음)
	온라인 협의를 개최했는가?	아니요
	온라인 협의 링크를 기재하시오.	
	대면 협의를 개최했는가?	불명
	의사록 요약문을 제공했는가?	아니요
	의사록 요약문 링크를 기재하시오.	해당 없음
	협의를 공개적이었는가, 비공개적이었는가?	해당 없음
	IAP2 스펙트럼에 따라 협의를 평가하시오. ¹	안내
계획 실행 중	실행 기간 중 정기 포럼이 열렸는가?	아니요
	협의를 공개적이었는가, 비공개적이었는가?	해당 없음
	IAP2 스펙트럼에 따라 협의를 평가하시오.	해당 없음

사전 공고 및 인식 제고

정부가 OGP 실천 계획 개발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알렸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인식 제고 활동의 수행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실천 계획의 협의는 주로 전자 거버넌스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정부 3.0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다양한 조정 기관이 2013년 말부터 2014년 5월까지 2차 OGP 실천 계획에 명시된 여러 포럼을 개최했다. 이 중 2014년 7월 300인으로 출범한 국가오픈데이터포럼은 2014년 10월 이래 2회 이상 회합을 가지며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² 그러나 1차 포럼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의견과 정부의 후속 정보 미 제공으로 미루어 볼 때 OGP 공약의 형성으로 직접 이어진 정부와의 쌍방향 소통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가 시민사회단체를 협의의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정부 정책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쌍방향 소통이 현저하게 증대됐다고 여기지 않았다.³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회의의 존재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기업 담당자, 기타 정부 오픈 데이터 사업 추진 이해관계자 대부분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이 IRM 연구원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그들은 이메일을 통한 개별 초청을 받았으며 1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함께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된 행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협의 수준 및 규모

실천 계획 개발 협의의 수준 및 규모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부는 협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질문 목록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해관계자 선정 및 초청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⁴ 대부분의 오픈 데이터 및 반부패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실천 계획 구성 단계에서 정부와 협의를 가진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2014년 5월 공공 데이터 그랜드 오픈 포럼을 개최해 OGP 국가 실천 계획에 포함된 관점과 최우선과제를 수집하는 주요 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포럼에서 실천 계획 초안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실천 계획, 자체 평가 보고서, 공직자 개인 면담 등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OGP 실천 계획 개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활발한 양방향적 협의가 이뤄졌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2014년 4월에 이뤄진 '정부 3.0 실천 계획' 초안에 대한 협의에서 나온 관계자 조언과 의견이 이후 2차 OGP 국가 실천 계획에 반영됐다고 주장한다.⁵

행정자치부는 여러 기존 오픈 데이터 포럼을 실천 계획 초안 및 실행에 결부시켰으나 빈도, 선정 절차, 관계자 초청 등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예로, 행정자치부는 정부 3.0 계획을 공유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집하는 자리로 2014년 4월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가 이 포럼에서 나온 관계자 의견을 OGP 공약 개발에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OGP 국가 실천 계획에서 이 협의를 간략히 언급하고 있으나, 정부가 행사에 대해 다른 주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다양한 비영리기관 뉴스 웹사이트는 다른 국가오픈데이터포럼 회의는 언급하고 있으나 2차 OGP 국가 실천 계획에서 언급된 포럼 회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2013년 10월~12월, 행정자치부는 민관 협력 관계 개선 모델 개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학술인 5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했는데, 이를 OGP 국가 실천 계획 개발 안내를 위한 협의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 실천 계획을 어떻게 안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협의체는 새 OGP 국가 실천 계획 수립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초빙으로 이뤄진 연구 단체로 OGP 가치와 일치하는 공개 협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온라인에 수행한 연구와 회원명이 공개돼 있지 않다. 2차 국가 실천 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OGP 공약에 이들의 연구 결과가 포함돼 있으며, 정책 형성에서 민관 연구 협력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 기관으로는 적합하지만 공개 협의로는 볼 수 없다.

2014년 2월, 정부는 인원 미상의 관계자와 토의를 가졌다. 단, OGP 국가 실천 계획은 협의를 수행한 단체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및 위례시민연대를 거론한다. 이 협의가 비공개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논의는 정부 3.0 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요청되지 않은 정보 공개의 개선과 정보 공개 절차 감시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보조 연구원과의 면담에서 2개 단체 모두 관련 회의가 10여 개이다 보니 특정 회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거나 회의 관련 추가 자료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4년 3월, 데이터 공유 16개 전략 부문의 연계 정부 부처에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민간 기업 및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집하는 데이터 공유 대책팀을 운영했다. 그러나 대책팀과 참여 시민사회단체의 선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조사 절차 초기에 IRM은 2차 OGP 국가 실천 계획 중 한 섹션에서 행정자치부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포함하기보다는 장기간 정부 연계 사업을 담당할 조직 등 유력 관련자 위주로 협의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문제의 섹션은 2개월간 KMA와 협력하여 '맞춤 서비스 매뉴얼' 개발을 완료했음을 명시한 부분이다. (KMA는 비영리, 기업-관리자 교육 센터로 여러 주요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전 에너지자원실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는 관계자 '협의'에 부합한다기보다는 컨설팅 서비스로 볼 수 있다. KMA는 기업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원 교육에 참여하며, KMA가 제작한 매뉴얼이 4월 공개된 정부 3.0 실천 계획에 포함돼 있다. 행정자치부는 2차 OGP 국가 실천 계획에 포함된 이 매뉴얼의 목적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4월에 다른 모든 시민사회단체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기 전에 정부가 KMA와 협의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협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경제력 있는 재벌 기업, 이러한 기업인들의 협회와 정부 간의 유착 관계는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히 언급하는 한국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이다.⁶

¹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 "IAP2 Spectrum of Political Participation."

<http://bit.ly/1kMmIYC>.

² 오픈 데이터 한국 포럼.

http://www.opendatakoreaforum.kr/index.php?module=Board&action=SiteBoard&iBrdNo=1&Mode=SELECT_FORM.

³ 오픈넷코리아, 한국투명성기구, IndiLab, 코드나무/Code for Seoul(동일 조직)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기거나 공약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위례시민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OpenGirok) 두 단체는 정부가 국가 실천 계획 형성에 있어 2014년 2월 해당 단체를 협의 대상에 포함한 특정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했으나 이는 단순히 해당 단체가 참석하는 관계자 및 정부 관련 회의가 많기 때문이었다.

⁴ 행정자치부, "서울, 한국: 국제 오픈 데이터 워크숍" (2014).

⁵ 국제 오픈 데이터 워크숍. 행정자치부 및 국가정보원. www2014.kr/program/intl-open-data-workshop, 2014년 9월 3일 접속. 연구자 주: 해당 워크숍이 국가 실천 계획에서 정부 3.0 실천 계획 수립에 활용했다고 언급한 워크숍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자체 평가에서 더 자세히 다루지 않아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 또한, 일정에 다양한 국제 및 한국 발표자가 나열돼 있으며 관계자 의견이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고려되었는지 많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⁶ TY Kong,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South Korea: A Fragile Miracle* (London: Routledge. 2013).

3. 실천 계획 실행

OGP에 참여하는 정부는 OGP 실행에 관한 다자간 협의를 위한 정기 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포럼을 조직해야 한다. 이때 기존의 포럼을 활용하거나 새 포럼을 조직할 수 있다. 이 장은 정기 회의 관련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1차 실천 계획 기간과 마찬가지로 2차 실천 계획 기간(2014~2016) 동안에도 이해관계자 다자간 정기 협의가 없었다. 학술 전문가 및 기업과의 비공개 협의를 통해 오픈 데이터 관련 공약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참여도는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OGP 공약 실행 과정에서 시민 사회의 참여는 실현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OGP 절차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오픈 데이터 공약 실행 기간 중 정부는 그랜드 오픈 데이터 포럼이라는 기존 단체 및 기타 여러 비공개/공개 회의를 통해 관계자 일부와 연계했다. 그러나 참석자가 오픈 데이터 문제를 넘어 OGP 공약 실현 진전을 논의했다는 근거가 없다. 오픈 데이터 관련 포럼이 조직되었음에도 코드나무나 한국투명성기구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는 포럼의 의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대부분 발표, 연설, '완제품' 청취를 요청했다고 생각했다.

조사 기간 중 대부분, 정부는 2차 국가 실천 계획 자체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아 내용 및 실행 과정에서 실시한 회의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가 어려웠다. 정부는 2015년 10월 1일 IRM 연구원에게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공했다. 일부 공약 실행의 측정에 이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었다. OGP IRM 지원팀은 2015년 12월 1일 공약 실행과 관련한 추가 정보에 대한 후속 요청을 보냈으며, 2015년 12월 7일, 담당자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이 오픈 데이터 및 전자 정부 부문에서 앞서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한국 IRM 팀이 장기간의 실행 기간 및 조사 기간 중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무 절차를 안내했음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IRM 절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의미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부분이다. IRM은 한국어 IRM 소식지 발행, 정부의 미진한 OGP 홍보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공식 한국어 국가 실천 계획 요약본 번역 및 관계자 배포, 정기 논평 및 매체 활용, IRM 절차 안내, OGP 공약 관련 회의 개최 시도 및 2015년 9월 23일 1차 관계자 포럼에 정부 관계자까지 참석자 확대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IRM의 정부와 연계하려는 노력이 거듭 실패한 후 2015년 9월 25일 행정자치부 담당자와 웨비나 포럼을 가졌다.

행정자치부 담당자가 OGP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다시 반복됐다. OGP 절차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 부족은 1, 2차 기간 중 진행을 저해했다. 행정자치부 내 OGP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교체되어 OGP와 절차 진행 방법에 대해 담당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 반복됐다. 2015년 9월 IRM 초안 기한 직전,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담당자는 IRM 절차의 올바른 관계자가 아님을 명시했다.

4. 실천 계획 내용 분석

모든 OGP 회원국은 가입 후 첫 2년 동안 OGP 국가별 실천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정한다. OGP 국가별 실천 계획의 첫 단계는 구체적인 전략과 현행 프로그램 내용 등, 열린 정부와 관련한 현행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 이후 정부의 OGP 공약에 맞춰, 정부의 기존 정책 관행보다 높은 수준의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OGP 공약은 현행 사업을 보완할 수도 있으며 현행 개혁 완료에 필요한 단계를 신설하거나 새로운 영역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별로 환경과 정책적 이해에 맞게 적절한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 OGP 공약은 반드시 회원국이 동의한 OGP 협치 규약 및 열린 정부 선언을 준수하여야 한다. IRM은 열린 정부 핵심 가치와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정보 접근성

해당 공약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해야 한다.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정부 보유 정보에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보유한 오염 관련 정보는 '정부 활동'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니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 접근성 관련 공약과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

데이터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정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개별 건설 계약 공개와 대규모 건설 계약 데이터 공개는

- 오픈 데이터 및 데이터 공개 지원 시스템에서의 정보 공개를 포함할 수 있다.
- 능동적 및 수동적인 정보 공개를 모두 포함한다.
- 데이터 접근성 확대 및 정보의 기술적 가독성 개선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 옴부즈맨 또는 정보 조사위원회 등 정보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다.
- 정부 관계자 혹은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이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부 의사 결정 및 기초 기능 수행의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
- 정보 획득 비용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5 Star for Open Data 설계(<http://5stardata.info/>)를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 참여도

시민 참여 관련 공약은 공식적인 시민 참여뿐만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시민 참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시민 참여 학회의 시민 참여 스펙트럼(<http://bit.ly/1kMmIYC>)에 설명된 바와 같이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모색하기 위해 '협의', '연계', '협력' 또는 '권한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

시민 참여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정책 결정 과정을 시민 사회의 이해관계자 전반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또는 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행위자가 이런 포럼을 구성할 경우 전체 정책 실행 기간에 걸쳐 '하향식' 정책 결정 전달 과정이 될 수 있다.
-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의미 있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여기에는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종종 포함되나 공식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로 취급 받을 권리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시민 공간에서 참여를 가능케 하는 광범위한 운영 환경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포함하며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증진 개혁
- 노동조합법 또는 NGO 관련법을 포함한 연대 개혁
- 시민 제안, 선거, 청원 등 공식적인 민주 절차의 투명성 증진 개혁
- 다음의 공약은 더욱 넓은 의미의 시민 참여와 명확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공약의 예시이다.
-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명시하지 않고(이 공약은 '정보 접근성' 관련 공약에 포함된다) 정보 공개로 인해 참여가 증대할 것을 전제하는 공약
- 시민 참여 강화 메커니즘을 명시하지 않는 분권화 공약
- 시민 참여 메커니즘이 없이 기관 간 협력을 참여로 규정하는 공약
- 참여자가 정부 선정 조직으로 국한되는 메커니즘을 포함한 공약도 '연관성 부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공 책임성

공공 책임성 증진 공약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정부 법령, 규정 및 제도가 잘 정비돼 있어 정책 행위자들의 정책 행위가 당위성을 지니며, 해당 법령의 요건과 비판을 반영해 수행되며, 실패 시 책임을 받아 들이고 법과 공약을 준수하여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공약이 '열린 정부'의 핵심 목표와 일관성을 지니고 '뚜렷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려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즉, 내부에서만 관여하는 책임성 시스템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공약은 장려할 만하며 OGP 과제를 충족할 수 있으나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방성의 결여로 인해 '뚜렷한 연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내부 대상 메커니즘이 정부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시민 대상 요소를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 기관 활동과 관련해 민감하지 않은 메타데이터 공개(최대 공개 원칙 준수)
- 공약 수행에 대한 시민 감사
- 공약을 수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시민 주도적 호소

강력한 책임성 관련 공약은 공직자 또는 기관의 권한, 의무 또는 행위의 결과의 소재를 분명히 한다. 공식적인 책임성 공약은 공식 불만 제기 또는 범법 행위 보고 및 시정 수단을 포함한다. 강력한 공약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정보 액세스 거부에 대한 호소 절차 마련 또는 개선
- 사법 메커니즘의 비용, 속도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한 사법 시스템 접근 개선
- 사법 메커니즘의 공개 정밀 조사 개선
- 시민 고충 처리 공개 추적 시스템 마련(경찰 추적 소프트웨어 또는 부패 척결 핫라인 등)

정부는 책임성 개선을 언급하지만 어떤 메커니즘이나 개입을 통해 이 정보를 결과나 변화로 이끌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정보 또는 데이터의 단순 제공에 그치는 공약은 책임성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세한 정보는 <http://bit.ly/1oWPXd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성 및 책임성을 위한 기술 및 혁신

OGP는 기술 및 혁신 활용 증진을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기술 및 혁신을 활용하는 공약은 다음을 통해해 개방성과 책임성을 증진해야 한다.

- 협력, 시민 참여, 정보 공유 기회를 제공하는 신기술 장려
- 시민이 정부 사업을 이해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 정보 공개 증대
- 이러한 기술 활용의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또한 기술 및 혁신으로 분류되는 공약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시민 사회 및 기업 참여 절차에 대한 공약으로 신기술 활용을 통한 시민 권한 강화 및 정부 투명성 증진을 위한 효과적 실천 방안과 혁신적 접근법을 규명할 수 있다.
- 개방성 및 책임성에 필요한 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및 시민 역량 지원에 대한 공약을 세울 수 있다.
- 정부 부처와 일반 시민의 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모든 전자 정부 개혁이 정부 개방성을 증진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 정부 공약 수립 시에는 정보 접근성, 시민 참여 또는 공공 책임성 중 하나 이상을 증진하는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열린 정부 공약을 완수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회원국들은 각 해마다 완료할 공약 내용을 담은 문서 어디에든 일정 및 기준 지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 실천 계획에 포함돼 있는 각 공약을 상세히 살펴보고 실행 1년차를 분석한다.

IRM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지표 및 방법은 IRM 절차

매뉴얼(<http://www.opengovpartnership.org/about/about-i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측정 도구 중 OGP 회원국 간 경쟁을 장려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별표된 공약'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별표된 공약은 모범적인 OGP 공약으로 간주된다. 별표를 획득하려면 공약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변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별표된 공약은 구체성에 있어 '보통' 또는 '높음'에 속한다.
2. 공약의 문구가 명확하고 열린 정부와 뚜렷한 연관성을 지녀야 한다. 특히 정보 접근성, 시민 참여 또는 공공 책임성 중 하나 이상의 OGP 가치와 연관성을 지녀야 한다.
3. 별표된 공약은 '보통' 또는 완료된 경우 변용 가능성이 '높음'으로 평가된다.
4. 공약의 실천 계획 실행 기간 중 현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 별표된 공약은 '상당 부분 완료' 또는 '완료'로 평가된다.

이 기준에 근거할 때 한국 실천 계획은 별표된 공약이 없다.

OGP 공약 모델 기대치를 높이고자 2015년 초 별표 기준을 업데이트했다.

측정 가능성, OGP 가치와의 뚜렷한 연관성, 보통 또는 높은 변용 가능성, 상당 부분 완료 또는 완료라는 이전 기준 하에서는 1개 공약이 별표를 획득한다.

이 기준에 근거할 때 한국 실천 계획은 별표된 공약이 1개이다.

- 공약 3.E. 민간 부문의 공공 데이터 활용 촉진

이 장의 그래프는 진행 보고 절차 중 IRMI이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전체 데이터세트는 OGP Explorer www.opengovpartnership.org/explor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약 일반 개요

개요

국가 실천 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투명성, 책임성, 및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2013년 6월 발표한 일련의 기술 분야 사업인 정부 3.0을 토대로 한다. 정부 3.0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부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천명했다. 2013년 10월, 한국 정부는 정부 3.0 실현의 법률적 수단이 될 정보 공개 법안을 실행했다.

따라서 OGP 국가 실천 계획 중 5개 중 3개 공약은 오픈 데이터, 전자 정부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한 민관 협력 증진 및 정보 공개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차 국가 실천 계획 기간, 정부는 정보 공개 및 오픈 데이터 영역에서 더욱 구체적인 공약을 설정하는 진전을 보였다.

그 외 2개 공약인 1b (맞춤 서비스 제공) 및 2d (공공 서비스 윤리 증진)은 시민 참여 및 부패 척결과 관련한 시민의 다양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한다. 1b에서 정부는 노인 빈곤, 높은 자살률, 알코올 남용, 여성 노동자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등 공공의 요구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선정 및 마련을 위해 더 나은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명시한 실행 목표와 실행 방법(명시된 경우)을 바탕으로 각 공약의 마일스톤을 도출했다. 연구원은 1a에서 1개, 1b에서 3개, 2c에서 3개, 2d에서 4개, 3e에서 4개 마일스톤을 도출했다. 공약은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분석됐다.

1. 공공 서비스 개선

a: 민관 협력 증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사용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계획하고 있다. 오프라인 채널은 전문가 회의 및 시민 배심원을 포함하며, 온라인 채널로는 SNS, 웹 정책 토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 부처에서 이뤄지는 민관 협력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2015년까지 전국 지방 정부의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토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민관 협력이 정책 결정의 결과가 아닌 시민 참여와 연계된 결정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양적인 목표 수립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 참여 및 다양한 정부 부처의 모범 사례 공유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주요 사업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 일정을 마련하고 해당 온라인 정책 토론에 시민 단체 또는 개인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 주: 이 공약에서 4가지 마일스톤을 도출했다

1. 민관 소통 증진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 및 일반 시민과의 개별 협의를 포함하는 '오프라인 채널' 과 SNS, 웹 정책 토론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구축한다.
2. 다양한 정부 부처의 민관 협력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
3. 2015년까지 지방 정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 온라인 논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4. 주요 정부 사업에 대한 온라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초청 없이 시민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약 개요	구체성				OGP 가치 연관성				변용 가능성				완료 여부			
	영역 (영역)	이민	백과	이민	정교	시민 참여	정교	신기술	영역 (영역)	이민	백과	이민	미착수	제한됨	면허	면허
전체 평가		✓			✓	✓		✓		✓				✓		
1. 협의 채널 구축		✓				✓				✓				✓		

2. 민관 협력 사례	✓				불명				✓					✓			
3. 온라인 논의 플랫폼		✓				✓		✓		✓				✓			
4. 국책 사업의 온라인 논의		✓			✓	✓		✓		✓				✓			

어떤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이 공약은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신문고 및 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회의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 활용을 통한 협의 채널 구축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 외국어 사용자를 포함해 시민에게 모범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이 공약은 기존의 성과에 기반하며 이미 완수한 과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면담에서 정부가 관계자의 우려를 주의 깊게 받아들였는지 의문을 표했다. 공약의 의의와 기존 포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 검토 기간 동안 국민신문고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 협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공약 완료의 근거 부족과 모호한 문구로 인해 진척 수준을 측정하기 어려워 공약 완료 수준이 '제한적'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마일스톤 1 성취는 제한적이다. IRM 연구원은 정부가 협의 채널 구축을 완료했는지를 정부나 시민사회단체 면담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다양한 전자정부 포럼 마련, 국민신문고 정책 개발,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설립, data.go.kr 등의 웹사이트 구축 및 확대를 통해 이 분야가 기존의 잘 구축된 중점 영역이라는 인상을 준다.

마일스톤 2는 모호하게 구성됐다. 자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및 경찰청은 철저한 정책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집했다. 그러나 자체 평가의 후속 활동을 다루고 있지 않아 마일스톤 상의 여러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정부가 정부 부처의 민관 협력 모범 사례를 제시한 시기와 방법, 이러한 모범 사례 선정 방법, 목적 및 사례의 공개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웹 검색으로 찾을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를 토대로 이 마일스톤의 완료 수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공약 문구의 모호함과 명확한 기준 지표의 부재로 마일스톤 3 및 4의 완료 수준 역시 확인이 어렵다. 자체 평가 보고서는 정책 토론 관련 부문과 국민신문고 온라인 플랫폼의 확대의 진전을 강조한다. 자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신문고 플랫폼 정책 토론에 정부 부처 199곳의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통합됐다. 보고서에는 '전자 청취, 정책 포럼 및 설문조사'를 통해 2,869개 정책 문제에 대해 시민과 소통이 이뤄졌음을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 과정에서 공약 실행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해당 논의로는 '인터넷 부문 규제 개혁(2015년 4월)', '1인가구 대책 마련(2015년 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 해소(2015 9월)', '한국 미래 비전 구축(2015년 10월)' 등이 있다.

행정자치부가 협의 절차를 주요 정부 사업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연구원은 이 마일스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정부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 참여가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국민신문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는 2012년 자료이며 검토 기간 중 이 웹사이트의 사용자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¹ 그러나 OGP IRM 지원 팀의 12월 1일자 요청을 포함해 IRM 연구원이 정부에 추가 정보를 계속 요청했음에도 이 마일스톤의 완료 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완료 수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행의 성과는?

이 공약은 공약 정부 관행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명확한 기준 지표의 부재로 인하여 실행 및 효과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 실행이 성공적이었더라도 해당 정책 영역에 끼친 효과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연구원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2주~1개월 간격으로 확인했으나 업데이트 등 부가적인 부분의 변화 이외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4개 마일스톤 중 3개의 변용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 부처 민관 협력 '모범 사례' 제시를 약속한 마일스톤 2는 OGP 가치와 뚜렷한 연관성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내부 소통과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이는 기존 관행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 마일스톤의 문구와 달리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는 정부 부처의 '민관 협력' 모범 사례 제시가 아닌 정부 부처가 온라인 논의를 통해 수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e-People.go.kr이 해당되는 마일스톤 3은 지속적으로 시민이 민원 또는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1, 2차 OGP 기간 모두 이해관계자에게 품질과 설계 효율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오픈넷코리아의 박경신, 박지원,

한국투명성기구의 이상학 등의 관계자는 접수 이후 처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 전문가인 이상학은 국민신문고의 온라인 민원 및 고충이 정부 여러 부처를 전전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로 담당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했다. 오픈넷코리아 대표 박경신은 민원에 제기된 고충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했다. 1차 포럼에 참석한 이해관계자 다수가 여기에 동감하며 온라인 플랫폼 행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공약의 과제 상당 부분은 사실상 국민신문고나 민원24처럼 OGP 실천 계획 이전에 한국 정부가 이미 운영 중이며 수상 경력도 있는 여러 전자 정부 웹사이트에서 구현돼 있다. 이 온라인 서비스는 이미 공약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기존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성과가 있었는지 측정이 어렵다. 정부는 공약에 명시했듯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지는 않았으며 기존에 완료된 활동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선 방향

IRM 연구원 및 이해관계자는 차기 국가 실천 계획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권고한다.

1. 이해관계자 협의에 있어 공약 처리 프레임워크나 메커니즘을 포함해 구체적인 마일스톤과 공약 개발 및 실행이 유의미하고 시의적절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2. 연간 민원 처리 달성 및 정부 기관 간 소통 개선 지표를 마련해 시민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기존 전자 정부 성과를 토대로 기존 관행 수준을 넘어서도록 확대하려는 노력을 권장한다.

특히 이해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민원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민원에 대한 책임 소재 확인 및 위임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연구자는 정부가 특정 기간 내 처리되는 민원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약을 작성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¹ 행정자치부, "e-사람: 운영성과." <http://www.epeople.go.kr/jsp/user/on/eng/intro05.jsp>, 2104년 9월 2일 접속.

한국 정부는 다양한 공공의 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공공 서비스를 일반 서비스(공공 안전 등), 대상 집단 맞춤형 서비스(산모/신생아, 초등/중/고 및 대학생/구직자 및 노년층), 취약 계층용 서비스(장애인, 농어촌, 기타 소외 계층) 및 기업용 맞춤형 서비스(소기업, 중소기업 및 일반 기업)의 4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2014년 한국 정부는 민간 부문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50대 주요 서비스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본격 장려한다. 시민 참여, 자문단, 국가 설문조사를 통해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공 서비스 설계 민관 협력 대책팀이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2015년에는 공공의 요구에 대응해 이러한 주요 사업을 수정 및 심화 개발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시민 공동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협의 및 워크숍을 다수 개최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달해 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도입한다.

1. 2014년까지 민간 부문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50개 주요 서비스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본격 장려한다.
2. 2015년까지 이러한 공공의 요구에 대응해 주요 사업을 개발한다.
3. 협의 및 워크숍을 다수 개최해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도입한다.

26

3. 공공 서비스 신설

	✓				✓				✓				✓			
--	---	--	--	--	---	--	--	--	---	--	--	--	---	--	--	--

어떤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이 공약은 50개 주요 사업 선정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발 및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공개 협의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공공의 요구에 대응해 주요 사업을 개발 및 맞춤화한다.

실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안전 등의 일반 서비스, 산모/신생아, 학생, 구직자 및 노년층 등 대상 집단 맞춤 서비스, 장애인, 농어촌, 기타 소외 계층 등의 취약 계층용 서비스 및 소기업, 중소기업 및 일반 기업을 위한 기업용 맞춤 서비스의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이 공약의 진척 수준은 제한적이다. OGP 기간 중 정부는 50개 주요 사업 중 첫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마일스톤 1).¹ 50개 사업이 모두 선정된 후 완료 수준이 상당 부분 완료로 평가될 수 있다. 2015년 12월 정부 담당자는 20개 주요 사업 선정 관련 정보가 각 조직에 배포됐으며 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됐음을 언급했다.² 담당자는 배포된 조직명 및 활동 영역은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자문단 의견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해 주요 서비스 사업을 선정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³

마일스톤 2는 정부가 선정 사업을 공공의 요구에 대응해 수정 및 심화 개발했다는 근거가 없어 미착수로 평가된다.

신규 공공 서비스와 관련한 마일스톤 3 역시 완료 수준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실천 계획은 공공의 요구에 따른 특별 서비스 구축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으나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실행 현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신규 공공서비스의 일례로 새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상속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주민등록지의 관공서에서 사망을 등록하고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액 및 부동산 등의 재산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이 공약의 일환으로 선정된 서비스 중 '금융, 법률 및 경영 컨설팅'과 연관된 서비스는 없음을 언급했다.

행정자치부 온라인 게시판, 구글 및 네이버(한국어) 검색을 추가로 실시해 오픈 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발표, 팸플릿, 일반 정보 문건은 많았으나 2014년 공개된 민관 협력 계획 또는 의사록은 없음을 확인했다.

실행의 성과는?

공약이 본질적으로 기본 정부 서비스의 확대이므로 변용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공약에서 정부가 시민과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검토 기간 중 협의가 시행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 기업 웹 포털인 네이버 및 다음과 협의를 거쳤다. 이는 국내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아닌 양자 관계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력 관련자'와의 협업의 일례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로서 장애인, 노년, 복지대상자 및 기타 소외계층 지원 등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오래 전부터 유지했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장애인, 농민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는 질적으로 우수하기는 하나 이것이 OGP 가치와 연관성을 지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민관 협의가 특별히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협력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여겼다. 일부는 시민 의견이 실행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⁴ 1차 OGP 관계자 포럼에서 한국투명성기구 선임 정책 위원인 이상학은 공공 서비스는 우수한 한편 정부가 이러한 서비스 초안 기획 및 개발과정에 외부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Open Knowledge 및 LiST Inc. 현지 담당자인 김보람은 '열린 데이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는 오픈 데이터의 일반적인 정의 기준을 인용하며 공공 서비스 제공이 '열린 정부' 프레임워크를 통해 현저히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코드나무 및 Code for Seoul 활동가인 임영재는 정부가 주요 대상은 적절히 선정했으나 외부 행위자의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완료하고자 하기 때문에 노력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픈넷코리아의 박경신, 박지환, 한국투명성기구의 이상학 등의 관계자는 투명성 증진과 민관 협력 공개를 천명할 경우 이 공약의 유용성과 연관성이 현저히 증진될 것으로 보았다. 이해관계자는 더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여겼다. 여기에는 정부 자문단 명단 및 '유력 관련자' 여부와 선정 방법, 회의 논의 주제, 의견의 다양성 및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세 정보는 찾기 쉬워야 하며, 한국 검색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자문단 구성, 설문조사, 민관 공동 공공 서비스 설계 대책팀 등으로도 일정 수준의 혁신은 가능하다. 만약 정부가 이를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했다면 개발이 관계자들의 인식처럼 일방적인 활동에서 나온 결과가 아님을 의미한다.

향후 개선 방향

이 공약은 공공 서비스 개선의 좋은 시작점이다. 그러나 향후의 성과를 위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OGP 가치, 특히 시민 참여와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원은 행정자치부가 다음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1.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공공 서비스 제공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의견 설문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의 열린 정부 메커니즘과 관련한 구체적인 OGP 공약 마련
2. 각 마일스톤에 측정 가능한 기준 지표를 제공
3. 공공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관 협의의 상세한 기록 발행 및 보관

c: 정보 공개 증진

2014년에 달성해야 할 또 다른 목표는 공개된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될 정보를 10대 주요 영역(보건, 복지, 식품 안전, 보육, 금융, 교육, 소비자 보호, 여가, 취업 및 주택)의 상세 분야로 구분한 목록을 발표한다.

1. 2015년 연간 공개 문건을 1천만 건으로 확대한다.
2. 온라인으로 선택한 시민 감시 단체가 정보 공개를 감시한다.
3. '10대 주요 영역'하에 공개 데이터 목록을 발표한 후 2014년까지 공개되는 정보의 질을 향상한다.

공약 개요	구체성				OGP 가치 연관성				변용 가능성				완료 여부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이슈 영역 구체 성	
전체 평가			✓		✓	✓	✓				✓			✓		

1. 공개 문서 수 증대			✓		✓						✓			✓		
2. 시민 감시 단체 구성		✓			✓	✓	✓			✓				✓		
3. 공개할 데이터 목록 발표		✓	✓		✓					✓				✓		

어떤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이 공약은 연간 공개 문건 규모 확대(마일스톤 1), 정보 공개 감시를 위한 시민 감시 단체 구성(마일스톤 2) 및 공개 정보의 질적 향상(마일스톤 3)을 통한 정보 공개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6월 정부 3.0 정책이 발표되고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부는 여러 단계로 정보 공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공 데이터 로드맵(실천 계획에 기재되지 않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36%에서 더욱 확대해 2017년까지 원천 문서의 60%를 공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1억 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기준 지표 달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⁵

검토 기간 동안 공개된 데이터 규모 정보가 공개적으로 제공돼 있지 않아 공약의 전반적인 완료 수준은 제한적이다.

마일스톤 1 데이터 공개 규모 확대의 완료 수준은 제한적이다. 2015년 12월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정부 3.0 공식 웹사이트 open.go.kr에 게재된 수치를 들어 약 550만 개 항목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오픈넷 및 한국투명성기구와의 면담 및 1차 관계자 포럼의 논의 내용으로 미루어 정부가 수치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15년까지 1억 건 공개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픈넷 등의 이해관계자는 수치에 오독의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데이터세트에서 지방 데이터세트를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세트의 내용이 국가 데이터세트와 유사하므로 실제로 정부는 동일한 데이터세트를 중복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약 3e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일스톤 2 역시 진전이 크지 않다. 정부에 따르면 시민 50인을 시민 감시 단체로 선정하고 2015년 3월부터 감시를 실시했다. 정부의 시민 선정 기준과 감시 단체의 정보

공개 감시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정부에 따르면 감시 단체의 의견은 감시 단체 위원만 액세스할 수 있는 비공개 게시판에 기록된다. 행정자치부 웹사이트 및 한국 정부 검색 엔진에서 감시 단체나 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정부는 해당 단체의 회의 주기, 권한의 범위, 주요 결정 도달 방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구성한 정부 세금 지출을 감시하는 유사한 시민 감시 단체는 기록돼 있었으나⁶ 조사 기간 전반에 걸쳐 이 감시 단체를 찾을 수 없었다. 공공 감시 개선을 위한 감시 단체가 배타성을 띠는 점에서 마일스톤 완료 수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마일스톤 3은 IRM 연구원이 한국어 또는 영어로 10대 영역 '공개 예정 정보' 목록과 관련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완료 수준이 제한적이다. 정부가 마일스톤 기한을 2014년 말로 설정하였으나 10대 영역에서 다루는 문제의 내용과 방법 및 행정자치부가 공개될 정보를 발표하는 시점, 공개할 정보 선정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 정부 자체 평가는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다음의 진전을 보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중앙 및 지방 정부는 2015년 3월 말까지, 총 116개 공적 기관(정부 운영 이사회, 정부 투자 기관 등)의 경우 2016년 3월까지 정부 보유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오픈넷 및 한국투명성기구는 정보의 질적 향상이 현저히 이뤄졌음에 동의했다.

실행의 성과는?

정부 문서의 대규모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이 공약은 정부가 공개할 데이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변용성이 보통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보 공개를 현저히 개선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이 공약은 진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공약은 기존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다. 특히 신규 문서 공개 이전에 정보 공개 청구가 있어야만 하던 기존과 달리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해관계자는 이 공약에 대해 단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했다. 정부가 진전을 보였음이 분명하나 현재로서는 모든 공약 내용에 부응하지 못한다. 다양한 부처에서 실천 계획에 명시한 '주요 영역'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수적인 정보만을 과다하게 공개하고 있다.

오픈넷코리아 박경신은 지방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 없이 문서를 기밀로 분류하는 등 정보법과 관련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기밀로 분류된 이후에는 결정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법적 메커니즘이 많지 않다. Indi Lab 설립자 겸 CEO 전지은은 최근 공적개발원조(ODA) 기본 정보 공개 청구가 외교 기밀로 분류돼

거부됐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⁷ OECD 국가의 경우 이 정보가 공개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OGP 관계자 포럼에서 이 공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던 중, IRM 연구원이 조사 기간 중 이 공약을 위해 정보 공개 청구 비밀 취급 해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킨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Open Knowledge 현지 담당자인 김보람은 자신은 정부 3.0 관련 포럼 및 컨퍼런스에 여러 차례 초청됐으나 OGP 공약에 대한 협의가 특별히 진행된 적은 없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정부가 컨퍼런스에 관계자를 초청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하지만 공약 실행에서 의견을 반영하거나 협의를 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⁸ 정부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하기는 했으나 IRM 연구원은 문헌 조사, 자체 평가, 정부 담당자와의 후속 연락 등을 진행한 결과 이 공약에서 양방향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향후 개선 방향

IRM 연구원은 차기 실천 계획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한다.

1.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의 요구의 핵심인 '10대 영역'의 개발 시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과의 협의
2. 실행 기관에 대한 후속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 공개 청구가 합리적으로 처리 및 답변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3. 시민 감시 단체 선정 기준 및 회의 내용 관련 정보 공개

¹ 행정자치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맞춤형서비스 2014" (2014년 11월 17일).

http://www.gov30.go.kr/gov30/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4&mId=2&dId=1&ntId=4802, accessed December 7, 2015.

² 행정자치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맞춤형서비스 2014" (2014년 11월 17일).

http://www.gov30.go.kr/gov30/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4&mId=2&dId=1&ntId=4802, 2015년 12월 7일 접속.

³ 외교통상부, 이메일 서신, 2015년 12월 7일.

⁴ 2015년 9월 30일의 1차 포럼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한 문제였다.

⁵ 행정자치부, "추가보고서: IRM 파트너 연구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공하는 대한민국 발전 보고서" (2014). 2014년 8월 2일 열람. (문서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업로드가 필요함)

⁶ Korea.net (대한민국 정부 공식 포털), 시민 납세 감시단체에 관한 기사, 2015년 9월 14일.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00656&call_from=naver_news,
2015년 9월 23일 접속.

⁷ 제 1차 이해관계자 포럼, 2015년 9월 23일.

⁸ 제 1차 이해관계자 포럼, 2015년 9월 23일.

d: 공공 서비스 윤리 증진

퇴임 공직자가 고액 급여를 받는 민간 고위직에 임용되는 것을 막고자 2014년, 9.7%로 제한된 대상에 대해 퇴임 공직자 재임용을 철저히 감사한다.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14년 4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한국 정부는 퇴임 공직자, 공공 행정 교수, 기타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자문단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대상 제한 비율은 2015년부터 매년 확대한다. 또한 퇴임이 확정되는 직후 재산 공개 웹사이트를 통해 퇴임 공직자에게 퇴임 공직자 임용 제한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2014년 하반기부터 투명성 및 책임성을 증대하고 시민에게 신뢰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퇴임 공직자 임용 감시 결과를 정부 공식 윤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편집자 주: 이 공약에서 4가지 마일스톤을 도출했다

1. 2014년과 2015년에 퇴임 공직자 재임용 감시 계획을 개발 및 수행한다.
2. 퇴임 공직자, 공공 행정 교수, 기타 전문가 집단을 통해 감사 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연 2회 이상 자문단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3. 퇴임 확정 시 재산 공개와 관련해 퇴임 공직자를 위한 지침을 온라인으로 게시한다.
4. 정부 윤리위원회 웹사이트에 퇴임 공직자 임용 감시 결과를 게시한다.

공약 개요	구체성				OGP 가치 연관성				변용 가능성				완료 여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배우자 배우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고위직 고위직	내정 내정	고위직 고위직	신뢰 신뢰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배우자 배우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수익 수익	퇴직 퇴직	배우자 배우자	내정 내정
전체 평가			✓		✓	✓	✓			✓			✓			
1. 계획 개발 및 실행 점검			✓				✓			✓			✓			
2. 자문단 회의 개최			✓			✓	✓			✓			✓			

3. 온라인 재산 공개 가이드라인			✓		✓		✓			✓			✓				
4. 퇴임 공직자 윤리 감사 온라인 게시			✓		✓		✓			✓			✓				

어떤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이 공약은 퇴임 공직자 재임용 감시의 개선을 목적으로, 공직자가 퇴임 후 자신이 담당하던 동일 업계에 임용되는 일명 '회전문 인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을 낮추고자 한다. 퇴임 공직자 재임용 시의 '회전문' 및 '낙하산' 문제는 퇴임을 앞두거나 퇴임 절차를 진행 중인 고위 공직자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관계자가 오래 전부터 문제로 제기한 부분이다.

OGP IRM 지원팀이 정부에게 발송한 문서를 비롯한 거둬진 IRM 연구원의 요청에도 마일스톤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지 않았다. 문헌 조사 및 관련 웹사이트 조사에서도 퇴임 공직자 재임용 제한(마일스톤 1) 실행과 관련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연구원은 의사록 또는 '자문단 회의' 회의록(마일스톤 2)을 찾을 수 없었다. 관련 웹 검색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지침이 게시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마일스톤 3). IRM 연구원은 감사 결과를 공개(마일스톤 4)하는 특정한 '정부 윤리위원회 웹사이트'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이 웹사이트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웹사이트와 별도의 웹사이트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공약 마일스톤 실행에 대해 관계자의 언급이 별로 없었다. Open Knowledge 현지 담당자인 김보람은 부패 척결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으나 정부가 투명성을 경제 성장의 방편으로만 간주하며 시민 참여와 연계 개선에 필요한 요소로는 간주하지 않는다고 보다 광범위하게 언급했다.

자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4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됐음을 들어 이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법안은 퇴임 정부 공직자가 이전 5년간 종사한 분야 또는 산업의 민간 부문 재임용을 3년간 금한다. 이전 법안에서는 공직자가 퇴임 후 2년간 민간 부문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법안 개정의 개요는 이 공약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그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통과는 이 공약의 완료와 연관성이 없다.

실행의 성과는?

이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약의 변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약이 정부 관행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며 이해관계자들이 전반적으로 1차 기간 부패 척결 영역과 큰 변화를 찾지 못했다.

가치와 연관성이 있음에도 정경 유착 등의 더 시급한 문제 해결이 아닌 감사 결과, 자문, 퇴임 후 재임용 감시 등 절차 중심적인 개입을 모색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퇴임 후 공직자 재임용 문제는 2013년 1차 IRM 기간의 면담 및 2013년 10월 실시한 두 차례의 관계자 포럼에서 기업의 불법적인 이익 도모가 장비 안전 문제를 야기하여 이목이 집중됐던 원자력 발전소 사건에 뒤이어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은 재벌 기업이 GDP의 94%를 차지하는 만큼¹ 정계와 재계의 관계가 긴밀하다. 막강한 재계 권력은 막강한 정치 권력으로 이어져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재계 권력이 강력한 경제적 이익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면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 2015년 8월 수감 중이던 SK 최태원 회장을 두 번째로 사면한 예와 같이 이전 및 현 정부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영진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실시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재벌 총수에 대한 지속적인 사면 패턴은 이 공약의 가치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빈부 격차 해소 및 재벌의 정치 경제 권력 억제 등을 담은 '경제 민주화' 공약과도 배치된다. 2014년 8월, 비전 실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통령실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2차 경제 팀을 구성했다.² 그러나 최근의 사건으로 볼 때 관계자의 정경 유착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가 없다. IRM 연구원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경계가 모호한 전반적인 환경에서 이 공약의 실행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다.

거듭되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회전문 인사' 근절과 보다 넓게는 정부와 기업의 복잡한 문제 해결은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재벌인 삼성 그룹이 매년 보고하는 매출은 한국 GDP의 5분의 1에 달한다. 이견희 회장은 두 차례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복역하는 일 없이 두 차례 모두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³

그러나 이는 한국의 OGP 공약 중 기업 활용을 위한 오픈 데이터를 강조하는 정부 3.0 사업 하에 있지 않은 공약이다. 1차 국가 실천 계획의 유사한 공약인 '부패 없는 사회'는

2013년 9월과 10월의 이해관계자 면담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관계자들은 이 공약이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립서비스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이 공약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으나 면담한 시민사회단체는 부패방지법 통과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환영했다. 이 두 가지는 2016년 10월에 시행되는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향후 강력한 진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으로 행정 관련 부패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 규정을 마련했다.

향후 개선 방향

IRM 연구원은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 공개 액세스 및 검색이 용이한 퇴임 후 재임용 감시 결과 공개
- 자문단 회의를 실시하여 공약 실행에 관계자 조언 반영
- 부패방지법을 활용해 행정 부패 척결을 개선할 구체적 방안 모색. 예를 들어 무죄 입증 근거가 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강력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통령 사면을 금하는 공약을 고려할 수 있다.

¹ D. Kirk, "Putting a Stop to South Korea's Family Empires" (2015년 8월 10일). <http://www.wsj.com/articles/putting-a-stop-to-south-koreas-family-empires-1439229055>, 2015년 10월 23일 접속.

² N. Chandran, "Choinomics - Breakthrough for South Korea" (CNBC, 2014). <http://wD.ww.cnn.com/id/101881453#>, 2014년 9월 2일 접속.

³ J. Kollwe, "Disgraced Billionaire Lee Kun-hee Returns to Lead Samsung" (The Guardian, 2010). <http://www.theguardian.com/business/2010/mar/24/samsung-billionaire-lee-kunhee>, 2014년 9월 2일 접속..

3.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e: 민간 부문의 공공 데이터 활용 촉진

'법령 및 공공 데이터 촉진 기초 계획(2013 - 2017)' (Open Data Master Policy Plan)은 OGP 공약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이며 한국 정부 3.0 정책의 중요 요소이다.

이 계획의 주요 요소는 공공 데이터 개방과 오픈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다.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2013년 3,395개 유형, 16.1% 개방률에 비하여 개방률을 60%로 크게 증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 12,654개 유형의 데이터의 공개가 계획됐다. 공공 데이터 공개의 관련 마일스톤에서도 목표가 7,653개 유형의 데이터 및 개방률 36.3%(2014년), 10,016개 유형 및 개방률 47.7%(2015), 12,654개 유형 및 개방률 60%(2016)로 설정돼 있다. 오픈 데이터 생태계와 관련하여 원스톱 오픈 데이터 규정 프레임워크를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배포한다. 또한 정부 전반적으로, 민관이 연계된 오픈 데이터 생태계 지원 프레임워크를 실행한다.

주 담당 기관은 안전행정부이며 오픈 데이터 담당 부처 및 지원 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해당 기관은 정부 공공 데이터 포털(data.go.kr)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4월 기업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차 오픈 데이터 전략 회의가 개최돼 여기서 '공공 데이터 규정 및 촉진 실행 계획'이 통과됐다. 해당 계획에 따라 수요가 높으며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504개 유형의 주요 공공 데이터(각 부처의 평가 및 경기도청 오픈 데이터 파트너십 등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보유한 협의/자문단, 사용자 커뮤니티, 교육부 오픈 데이터 사용자 커뮤니티 등의 공개 피드백을 통해 규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공개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기업을 포함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민간 부문의 피드백을 받고 데이터 공유 정책에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약 40인의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전문가와 함께 2014년 5월 개최된 '공공데이터 그랜드 오픈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16개 전략 영역에 대한 민관 협력 데이터 공유 대책팀을 공식 출범시킨다. 16개 대책팀은 정부와 시민 사회 간 의사 소통 채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책팀은 오픈 데이터 공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최고 오픈 데이터 담당자가 지휘하며 '오픈 데이터 생태계 그룹'과 협력하여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한다. 대책팀은 오픈 데이터 주관 기관인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며, 민간 부문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민간 부문 의견을 고려하고자 주기적(예: 2개월 1회)으로 회의 및 컨퍼런스(연 1회 이상)를 개최한다.

3. 공개 대책 팀과 협의			✓		✓	✓					✓						✓
4. 모범 사례 확대 적용		✓			✓						✓						✓

어떤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이 공약은 2013년 6월 도입되고 정보공개법안을 통해 2013년 10월 법령화된 기존 정부 3.0 비전에 직접적으로 포함된다. 정보 자유 개선이라는 정부 3.0 계획의 중심 요소를 목적으로 한다.

2013년 말부터 행정자치부는 이 공약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매년 공개 규모를 확대하며 데이터세트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정부 3.0을 실행해 왔다.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단체와 포럼 및 토론회 개최해 정보 공개가 비즈니스와 기술에 유용하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넓게 보아 이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안인 '창조 경제'라는 비전의 실행에 기여해 한국이 이전의 제조업 기반에서 하이테크, 창의, 정보 기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일스톤 1은 상당 부분 완료됐다. 2016년까지 12,654개 데이터세트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OGP 정부 담당자에 따르면 2015년 11월 말 기준 총 15,894개 데이터세트가 공개됐다.¹

자체 평가 보고서에 자세한 정보가 명시돼 있지 않으나, '주요 데이터세트' 공개를 볼 때 마일스톤 2는 완료됐다. 단, 공약 실행 절차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정부는 실천 계획상에서 '데이터 유형'으로 언급한 504개의 '주요 데이터세트'를 공개했다. 정부 담당자에 따르면 '민간 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개별 부처가 504개 '주요 데이터세트'를 결정했다.²

그러나 자체 평가 보고서와 후속 연락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할 때 마일스톤 2에서 명시한 '협의'의 규모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이해관계자 선정 방법, 데이터 우선순위 식별 방법, 또는 협의의 공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산업, 학계 시민 사회 등'을 포함할 것을 언급하나 일반 시민은 언급돼 있지 않으며 피드백 반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정부는 '산업계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수요 분석'을 실시하고 고객 및 웹사이트 사용자에게 대한 CRM(고객 관계 관리)을 실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6개 정보 공개 부문을 '전략적'으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교통, 토지, 기상, 식품/의료, 문화/관광, 재난/안전, 보건/복지, 조달, 및 특허 부문이 포함된다.³

마일스톤 3도 완료로 확인됐다. 2014년 5월 공공데이터 그랜드 오픈 포럼을 통해 출범한 16개 대책팀은 각각 기상, 교통, 토지, 식품 및 의료, 농축산업, 문화 관광, 재난 및 안전, 보건 복지, 조달, 특허, 해양 수산, 사법, 과학 기술, 노동 및 고용, ICT 해당 부처에 속한다. 정부는 이들 대책팀이 '관련 부처'와 79개 '오픈 데이터 기업'이 참여한 포럼에서 출범하였음을 언급한다. 정부 담당자에 따르면 2014년 7, 8월 대책팀은 두 차례 '연석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각 부처가 별도로 관련 대책팀과 일련의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포럼 및 오픈 데이터 전략 회의를 통해 학계 및 시민 사회로 구성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기업 및 독립 전문가가 선정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계자 선정 절차와 대책팀 구성은 명확하지 않다.⁴

마일스톤 4는 모호하게 구성됐다. 그러나 IRM 연구원은 검토 기간 중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체 평가 보고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으나 정부는 민간 부문 모범 사례 웹사이트로 건축 행정(<http://open.eais.go.kr/>) 및 회계 데이터 모범 사례(<http://www.openfiscaldata.go.kr/>)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공공 데이터 포털 data.go.kr와 더불어 진전의 근거가 되는 39가지 모범 사례가 제시돼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주로 오픈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보여주는 의료, 기술,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다양한 개선 사례가 나열돼 있다. 일례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오픈 데이터를 활용해 백신 제공을 개선한 사례를 들 수 있다.⁵

실행의 성과는?

공약의 변용 가능성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2013년 여름 최초 공개된 정부 3.0의 데이터 공개 계획의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공개 데이터의 속성에 관해 요구되는 수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IRM 연구원 및 이해관계자는 진전이 있었으며 정부의 열정과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함에 동의한다. data.go.kr 웹사이트는 효율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파일 검색 및 조회가 편리하다.⁶ 파일 규모도 상당히 방대해 18,000건 이상의 파일을 다양한 형식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오픈넷, 한국투명성기구, 코드나무는 정부가 공공 책임성과 시민 참여 원칙을 광범위하게 연계하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⁷ 공개된 정보가 때때로 불명확하여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IRM 연구원은 식품 제조업체, 무료 주차장, 자전거 이용 구역 등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지적했다.

유용하기는 하나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이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및 웹 검색으로 널리 제공되고 있으며 최우선 과제로 상정할 수 없다.

관계자 중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은 지방 정부 및 자치 단체 데이터세트를 산정해 공개 데이터 규모를 부풀린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두 인접 지역의 담배 판매 통계가 별도의 데이터세트로 산정돼 검색 시 혼동을 초래하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⁸

이해관계자는 이 공약 실행에서 실질적인 공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시민 사회, 민간 기업, 학계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협의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공약이 정부 3.0에 대한 무관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기적 양방향 소통의 부족으로 이 공약의 변용 가능성이 저해됐다고 여겼다.⁹

공약은 데이터 공개 자체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해관계자와 정기 협의를 거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음에도 이러한 공개를 일방적으로 실행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IRM 연구원이 온라인으로 대책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정부의 16개 '대책팀' 운영 방식이 여전히 내부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는 마찬가지로 완제품의 수신자이며 데이터 공개 프로그램에 대해 발언하는 자리가 많지 않다고 느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약의 '시민 참여' 요소는 '데이터 공개' 요소에 비교해 취약하다.

공약은 국가 기밀 규정의 모호함과 기밀 분류에 대한 이의 제기 메커니즘의 부재 등 과도한 기밀 유지를 조장할 수 있는 정보법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조사 기간 중의 정보 공개 청구 거부로 미루어 다양한 정부 부처가 공약의 중요 원칙인 투명성을 내면화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질의에 대해 기밀 유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도로 표지판 데이터 제공을 거부한 사례는 오픈 데이터와 정보법에 배치되는 예로 볼 수 있다. 문제의 기업은 중앙일보에 보도돼, 정보 공개 관련 분쟁을 검토하는 신설 정부 기구인 오픈 데이터 중재 위원회와 접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고 언급했다. 2014년 7월 기준 위원회가 단 6건의 정보 공개 청구 이의만 처리했다는 점에서 정보법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¹⁰ IRM 연구원은 온라인이나 정부에 반복해 요청하는 방법으로 그 이후 개선을 나타내는 추가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다. 이해관계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여겼다.

전지은은 정부가 기본적인 해외 원조 데이터가 외교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례를 언급했다. 오픈넷코리아 박지환은 정보 공개 청구 행정 소송에 시간과 자원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중 어려운 사례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데 3, 4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정보의 가치는 희석된다.¹¹

IRM 연구원 및 이해관계자는 이 공약이 전반적으로 정보 액세스 및 공공 책임성 개선을 통해 기밀 유지 관행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공약이라고 여겼다.

향후 개선 방향

IRM 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2019년 최종 목표 일정 차질 여부, 공개 협의에서 안내된 데이터 공개 상세 정보 전년도 대비 개선 사항, 매년 공개되는 '데이터 유형' 수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보,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는 정보 보고서 공개 의무 등의 마일스톤을 포함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개방성을 증진하고 투명성 절차를 강화하는 마일스톤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시민사회단체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며 비판, 검토 또는 관련 법에 따른 정부의 정보 공개 청구 결정 변경 등의 권한을 지닌 오픈 데이터 이의 제기 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정보 공개 청구 이의 제기 절차 개선 마일스톤을 포함한다. 정부가 이의 제기 절차를 개선하고자 오픈 데이터 중재 위원회를 설립했음에도 이 영역은 여전히 미비하다. 일례로 정부는 이해관계자 요구에 따라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 데이터세트 공개 규모만으로 공약 성과를 측정하는 위험을 피하려면 단일화된 통합 데이터세트에 지방 데이터세트를 포함해 공개하는 국가적 수준의 데이터 공개 통합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약에 명시된 공공 이익 데이터 접근성 개선 목표에 더욱 기여할 수 있으며, 공약의 완료 수준 및 변용성 측정과 관련하여 개선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¹ 행정자치부, 이메일 서신, 2015년 12월 7일.

² 행정자치부, 이메일 서신, 2015년 12월 7일.

³ 행정자치부, 이메일 서신, 2015년 12월 7일.

⁴ 행정자치부, 이메일 서신, 2015년 12월 7일.

⁵ 행정자치부, 이메일 서신, 2015년 12월 7일.

⁶ 파일은 .xlsx, .csv, 및 .hwp 등 상호작용 및 검색이 가능한 형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IRM 연구원이 편의성이 낮은 투박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전 OGP 기간에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오픈넷 박경신은 .hwp 형식 활용을 선호하지 않았다.

아래아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doc 등 공유가 쉬워 통용되며 액세스가 가능한 파일 유형의 활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단, .doc는 컴퓨터 해독이 가능한 포맷에서 제외).

⁷ 제 1차 이해관계자 포럼, 2015년 9월 23일.

⁸ 제 1차 이해관계자 포럼, 2015년 9월 23일.

⁹ 제 1차 이해관계자 포럼, 2015년 9월 23일.

¹⁰ D.H. Lee and G.L. Moon, "Open Data Access a Work in Progress" (*Korea JoongAng Daily*, 2014년 7월 21일).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92277>, accessed 2 September 2014.

¹¹ 제 1차 이해관계자 포럼, 2015년 9월 23일.

절차: 자체 평가

조사 기간 중 행정자치부가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공했다.

V.1: 자체 평가 진단표

연간 진행 보고서를 제출했는가?	예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었는가? (대부분의 정부 마감 기한은 9/30이며 코호트 1 회원국의 경우 3/30)	아니요
현지어로 작성됐는가?	아니요
영어로도 작성됐는가?	예
자체 평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2주의 공개 논평 기간을 가졌는가?	아니요
시민들의 논평이 접수됐는가?	아니요
OGP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가?	예
자체 평가 보고서가 실천 계획 개발 중에 이뤄진 협의 검토를 포함하는가?	예
자체 평가 보고서가 실천 계획 실행 중에 이뤄진 협의 검토를 포함하는가?	예
자체 평가 보고서가 자체 평가 개발 중 공개 논평 기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가?	아니요
전 공약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는가?	예
실천 계획의 일정 및 마일스톤에 따라 각 공약 완료 수준을 평가했는가?	아니요

IRM 주요 권고 사항(2015년 이후에만 해당)에 대응했는가?	예
-------------------------------------	---

추가 정보 요약

정부는 일정에 따라 자체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2주간 공개 논평 기간도 없었다. 그러나 장기간 IRM 연구원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던 행정자치부는 2015년 9월 25일 IRM 보조연구원에게 자체 평가 보고서 제공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2015 9월 30일 OGP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보고서는 2015년 10월 1일 이메일 형태로 IRM 연구원에게 제공됐다. 그러나 2015년 10월 기준 한국어 자체 평가는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되거나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지 않았다.

자체 평가 보고서는 착수 여부 등 IRM 연구원 및 이해관계자의 질의 일부를 다뤘으나 문구가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온라인 데이터 관련 및 부패 척결 공약의 진전이 이뤄졌음을 언급했다. 일례로 자체 평가 보고서는 공약 1a와 관련하여 '인터넷 부문 규제 개혁(2015년 4월)', '1인가구 대책 마련(2015년 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 해소(2015 9월)', '한국 미래 비전 구축(2015년 10월)'에 대한 수 차례의 온라인 정책 토론에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정부가 이러한 논의를 공개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함에도, 정책 결정 과정의 결과 도출에 있어 외부 의견 범위 및 반영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OGP 가치와 일치하였는지 측정이 어려웠다. (1차 포럼에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민관 협력 측정 및 문서화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토론 및 컨퍼런스를 통해 수집한 외부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기타 자체 측정은 정부의 진척 수준이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데 크게 유용하지 않았다. 일례로 공약 2c ('정보 공개 범위 확대')의 완료 수준 측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기존 2,260개 항목에서 2017년까지 6,150개 항목[데이터 공개]으로 증대'한다는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조사 기간 중 정부가 '기후, 교통, 복지, 금융, 지리 관련 행정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모두 민간 부문에서 공개 요청이 높았던 정보'임을 언급하였으나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참여 채널을 구축'했다고 명시했다.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IRM 연구원 및 이해관계자가 실행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

이전 IRM 권고 사항 후속 조사(2015 +)

1차 기간 중 IRM은 진취적 자세와 연관성, 실행과 관련하여 2차 국가 실천 계획 및 2차 IRM 조사 절차 효율성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2차 국가 실천 계획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에 이중 1개 권고 사항이 반영됐다.

이 권고 사항이 어느 정도로 준수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자체 평가 보고서에 퇴임 공직자 재임용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라는 IRM 권고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 정부가 '공직자 윤리 강령 강화'라는 1개 공약(4d. 공공 서비스 윤리 증진)을 포함했다고 언급했다. IRM 연구원은 이 공약의 내용은 긍정적이나, 기준 지표가 여전히 모호하며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한다(퇴임 후 재임용 감시 강화, 퇴임 공직자에게 지침 제공). 따라서 정부가 측정 가능한 공약 작성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3~4쪽에서 자체 평가 보고서는 2차 국가 실천 계획에 반영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은 채 IRM 권고 사항을 언급했다. '정부 활동에 대한 공공 정보의 광범위한 공개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증대' 및 열린 정부와 전자 정부 간의 차별화 관련 항목이었다.

정부는 명예훼손법의 형법 규정, 공산주의를 효과적으로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규정 및 공적 및 사적 대화를 유출하는 적법한 내부고발을 범죄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철폐와 같은 주요 권고 사항 대부분을 준수하지 않았다. 1차 OGP 기간 중 민주당 의원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6. 현재 한국 상황

이 장에서는 더 광범위한 국가적 상황에서 실천 계획 공약을 살펴보고 차기 실천 계획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단계를 논의한다.

현재 한국 상황

한국은 발전된 민주주의와 높은 기술력 및 인력을 보유하고 2014 EIU 민주주의 지수(24점 중 21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얻는 등 국제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¹ 한국은 행정 절차에 대중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소수의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다. 사법적 검토를 통해 행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의 확고한 제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행정심판법²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³ 등 관련 법률에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다.

한국의 이러한 성공은 지난 30년간 이어진 시민 사회의 노력에 빚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87년은 한국 정부가 민주화의 물결을 맞아 정치 개혁을 단행하고 독재를 종식하며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확립하며 정치적 변혁을 맞이한 해다. 1989년 헌법재판소는 비록 실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정보 접근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해석하며 정부 내에 투명성의 원리를 각인시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⁴

1996년 개혁 첫 단계를 통해 한국은 정보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됐다. 두 번째 개혁은 1997년의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에 찾아왔다. 수십 년간 지속된 국가와 기업의 비민주적인 유착관계, 기업 지배 구조의 불투명하고 취약한 시스템, 무절제한 대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쇼크, 이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한국 경제를 부채 위기로 몰아넣었다. 1998년에서 200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김대중 정부는 구태를 청산하고, 투명성과 시민 참여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 정부에서 다수의 전자 정부 서비스가 마련돼 한국이 오픈 데이터 및 전자 정부 부문을 선취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1, 2차 국가 실천 계획은 대체로 기존 혁신 사업에 기반을 두었다. 2013년 6월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계획에 신설 공약 상당수가 법령화돼 있다. 여기에 향후 수 년 안에 데이터 공개 대폭 확대 및 새로운 정보 공개 청구 요청 시스템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⁵

한국의 모든 성과에 대해 1, 2차 국가 실천 계획은 이전과 현 정부 하에서 책임성, 투명성,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OECD에서 7번째로 높은 광대역 보급률⁶(웹 액세스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Global Integrity의 월드와이드웹 지수⁷에서 86개국 중

8위)을 자랑하나 인터넷 검열 문제가 있다. 검열 대상은 중복, 포르노그래피, 도박 또는 기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웹사이트 등이다. 2014년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담당 정부 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2013년보다 27.3% 증가한 132,884개 웹사이트의 검열을 요청했다. 그 결과 24,581개가 삭제되었으며 97,095개는 차단, 10,031개는 폐쇄됐다.⁸

2011년, 프리덤하우스가 한국의 언론 및 인터넷 자유도를 '자유로움'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움'으로 강등한 이후 한국의 자유도 등급은 이에 머물러 있다.⁹ 2013년 마거릿 세카가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명예훼손의 형사상 범죄 규정, 국가보안법 및 인터넷 콘텐츠 규제 법 규정의 모호하고 광범위한 이용' 등 한국의 '특정 법률 및 그 적용'이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¹⁰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자유도보고서(2014)에서 '국정원 정치 간섭 혐의를 포함한 기관 부패 및 남용'을 근거로 한국의 정치적 권한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¹¹ 검토 기간 중 한국의 정치적 공간 축소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대부분이 고교생이던 탑승객 300인이 사망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관련한 사례를 들 수 있다. 2014년 3월~10월까지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는 정부의 응급 상황 대처를 비판하는 유가족과 활동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2014년 4월 경찰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들어 피해자 유가족이 진도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하여 대통령에게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¹² 2014년 봄 이후 경찰은 세월호 참사 국회 조사를 개시하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청와대 부근을 행진한 대규모 집회를 저지했다. 집회 참석자 다수는 참사를 불러온 정경 유착 및 느슨한 안전 인식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2015년 7월 검찰은 집회 지도자인 박래군을 불법 시위 조직으로 체포하였으며 이는 국제 앰네스티의 비난을 받았다.¹³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게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사적인 관계에 있는 동료 남성과 만나고 있었다는 허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한국에서 가장 큰 모바일 메시지 앱인 카카오톡의 여러 개인 계정을 사찰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으며, 이는 국민적인 항의와 정보를 제출한 기업의 공식 사과로 이어졌다. 대통령 보좌관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한 사건 역시 비판에 직면했다.

2014년 10월 당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었던 일본인 기자 가토 다쓰야가 동일한 루머를 보도한 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그가 언급한 한국 조선일보는 철저히 조사받지 않았다. 가토는 2015년 12월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들 재판은 복수의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사례로, 정부 공직자 또는 한국 검찰이 비판을 진압하고자 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결과 정부에게 기소 당한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정치적 다양성의 축소와 정부 개방성 및 투명성 퇴보를 암시하는 추가적인 사례로 2014년 12월 정부가 북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진당을 해체한 사례를 들 수 있다.¹⁴ 이는 1월 5일 강연 중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 시민 신은미를 강제 추방하는 행위로 이어졌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전에 북한에 대한 해당 저서를 추천 도서 목록에 포함하고 도서관에 배포했다. 해당 도서는 논란 이후 즉시 목록에서 삭제됐다.

신은미의 경우 중복 발언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1948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90일 비자 면제 기간을 위반해 기소 없이 강제 추방됐다. 신은미는 추방 전에 강연 중 물리적 공격을 받았으며, IRM 연구원에게 자신에게 취해진 조치가 가혹하며 자신의 저서가 정치적인 이유로 와전됐다고 언급했다.¹⁵ 미 국무부는 신은미 사례를 국가보안법의 과도한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당국은 2013년 129건, 2014년 57건을 상대로 해당 법규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¹⁶

2015년 5월 치명적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제 및 한국 공공 보건 전문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한국 시민은 구글 지도와 페이스북을 사용해 클라우드소싱 '메르스 지도'를 만들어 알려진 사례의 위치를 기록하고 정부가 해당 사안을 공개하도록 압박했다. 2015년 6월 8일 최초 발병 이후 2주 이상이 지나 보건 당국이 여론의 압박에 의해 메르스 병원 24곳을 공개했다.¹⁷

2015년 7월, 한국 최대 기업의 주요 주주이자 정부 관련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주주 총회까지 논란이 된 삼성 C&T와 제일 산업 합병 투표 세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 투표는 삼성의 3대째 경영 승계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국민연금공단 전 최고정보책임자는 IRM 연구원에게 '긍정' 투표 및 전문가 준 독립 기관에 최초로 자문을 구하는 일반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결정이 수익성 및 절차적 관점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기 중 결정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 일화에서 정치 및 사업적 이해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독립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¹⁸

최근 정부는 국사 논의에 대한 통제 강화를 시도했다. 2015년 11월, 정부는 2017년 3월까지 민간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200인 이상의 학계인사가 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달인 11월 역사학자

박유하는 2차대전 중 일본군의 성노예였음을 주장하는 한국 여성 '위안부'에 대한 주류 인식에 반하는 2013년 저서와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건은 공공 신뢰를 낮추는 원인이 되었으며 공공 액세스, 참여, 책임성 개선 노력 저해의 요인이 됐다. 2014년 6월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한국인 응답자 중 23%만이 정부를 신뢰한다.¹⁹ 시민 사회와 협력을 증진하지 않으면 관련 OGP 공약 개발 및 실행의 향후 노력이 저해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해관계자 선정 최우선 과제

이해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국가 실천 계획이 오픈 데이터, 공공 서비스 제공 및 부패 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동의하며 진행 중인 정부 3.0과 정부가 1990년대 후반에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해관계자는 공무원 뇌물 수수와 이에 따른 특혜의 직접적 관련성을 증명할 필요를 제거할 부패방지법 통과를 성취로 꼽았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는 공약이 역시 연관성이 있으나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법 및 기타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다양한 과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봤다.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법의 과도한 사용이 한국의 상대적으로 젊은 민주주의의 결실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믿으며 일부 또는 전면적 폐지를 촉구했다.

이해관계자 다수는 일례로 정부가 세월호 침몰 이후 2년간 이에 대한 대응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해관계자는 국회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사 기간 중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예측 가능한 공공 안전 재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경 유착과 관련해 더욱 심층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확신한다. 이들은 투명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차후 이와 같은 국가적 비극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해관계자는 차기 국가 실천 계획에 다음의 공약이 포함될 것을 요구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적시 행위로 최대 7년형, 사실인 경우에도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명예훼손법의 형법 규정 폐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부고발자 수감에 사용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폐지. 일례로 이 법은 노회찬이 법률위원회 중 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공개한 후 그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데 사용됐다. 이 X파일은 당시 주미대사, 검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기업 및 고위 공직자 간 뇌물이 오간 혐의를 드러내고 있다.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데 사용된 국가보안법의 불법 '이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모호한 규정 폐지

한국 상황과 관련한 실천 계획 범위

한국의 오픈 데이터 성과는 인상적인 반면 국가 실천 계획은 투명성, 책임성 및 정보의 자유에 있어 광범위한 진전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제한적인 범위로 인해 기존 관행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계획이 아닌 기존 성과의 홍보 문서로 보이기도 한다.

국가 실천 계획이 국제 사회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어로만 발행됐고 한국어로는 전혀 번역, 배포,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IRM 팀이 이해관계자를 위해 비공식 번역을 일부 제공했다. 1, 2차 기간 IRM 최초 접촉에서 한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이해관계자 다수가 열린 정부 파트너십 또는 관련 정부 협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홍보가 미비하거나 전무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국가 실천 계획을 위한 몇 가지 건설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과 같은 주요 문제 해결로 범위 확대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OGP 가치와 뚜렷한 연관성이 있는 공약 작성에 중점
- 한국어 국가 실천 계획 공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에 중점
- 정부 3.0 포럼에서와 같이 이해관계자에게 메시지를 제공하는 일방적인 전달 지양

¹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5:

http://www.eiu.com/public/topical_report.aspx?campaignid=Democracy0115, 2015년 12월 22일 접속.

² 대한민국, "행정심판법" (영문판) (1984).

[http://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25783&type=new&key=.](http://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25783&type=new&key=)

³ 대한민국, "민원사무처리규정" (영문판) (1997).

[http://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29278&type=part&key=4.](http://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29278&type=part&key=4)

⁴ Kyu Ho Youm,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Case of South Korea since 1996" (Working paper series,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SSRN), University of Oregon, 2010).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067875.

⁵ "정부 3.0"의 공식 영문 요약본은

<http://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109276>에서 열람 가능.

⁶ OECD. "OECD Broadband Statistics Update" (2015년 7월 23일)

<http://www.oecd.org/sti/broadband/broadband-statistics-update.htm>, accessed 8 December 2015.

⁷ Global Integrity and the World Wide Web Foundation, "Web Index" (2014).

<http://thewebindex.org/report/>, 2015년 12월 22일 접속.

⁸ Freedom House, "Freedom of the Press 2015: South Korea" (2015년 9월 4일).

<http://www.refworld.org/docid/55f0012324.html>, 2015년 10월 22일 접속.

⁹ South Korea: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country/south-korea>, 2015년 8월 21일 접속.

¹⁰ "South Korea should widen the space for human rights defenders," UN expert says.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3년 5월 13일).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427&LangID=E#sthash.GMogKo0P.dpuf>, 2015년 8월 21일 접속.

¹¹ Freedom House, *Freedom of the World* (2014).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4/south-korea>, 2015년 10월 12일 접속.

¹² S. Mundy, "Fears Grow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Financial Times*, 2015년 1월 27일. <http://www.ft.com/intl/cms/s/0/b508e294-a152-11e4-8d19-00144feab7de.html#axzz3n1YV0sJ3>, 2015년 8월 21일 접속..

¹³ K.M. Lee, "Sewol Protest Organizer Indicted on Obstruction of Justice Charge," *Korea Times*, 2015년 7월 31일.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5/07/116_183935.html, 2015년 8월 21일 접속.

¹⁴ S.H. Choe, "South Korea Disbands Party Sympathetic to the North," *New York Times*, 2014년 12월 19일. http://www.nytimes.com/2014/12/20/world/asia/south-korea-disbands-united-progressive-party-sympathetic-to-north-korea.html?_r=0, 2015년 8월 21일 접속..

¹⁵ IRM 연구원과의 인터뷰, 2015년 1월 15일.

¹⁶ Human Rights Watch, "South Korea: Cold War Relic Law Criminalizes Criticism" (28 May 2015). <https://www.hrw.org/news/2015/05/28/south-korea-cold-war-relic-law-criminalizes-criticism>, 2015년 10월 22일 접속.

¹⁷ "Ministry discloses full MERS hospital list," *Korea JoongAng Daily*, 2015년 6월 8일.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05113>, 2015년 8월 21일 접속.

¹⁸ IRM 연구원과의 인터뷰, 2015년 7월 21일.

¹⁹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p. 220,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hdr14-report-en-1.pdf>, 2015년 8월 21일 접속.

7. 제반 권고 사항

이 장은 개별 공약이 아닌 OGP를 위한 향후 단계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를 담고 있다.

공통 권고 사항

연구원은 이 보고서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단일 공약에만 국한되지 않는 몇 가지 공통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 **IRM 및 OGP 절차 참여가 필요하다.** 2차 IRM 기간 중 상당 기간 연구원은 정부 관계자와 접촉하거나 각 공약 관련 담당 공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기본적인 문의에도 수 주에서 수 개월간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차 기간의 종료 시점인 2015년 9월까지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지는 않았으며, 행정자치부는 IRM의 요청에 답변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차 기간 중 시민 사회 참여 부족에 대한 서신을 받은 바 있으나 이로 인해 2014-2015년에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공개 문건의 부족으로 IRM 절차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실행의 공개적인 안내를 충분히 수행중인 지에 대한 IRM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저해됐다. 여기에 조사 기간 대부분에 걸쳐 자체 평가 보고서가 없다는 점으로 인해 해당 영역의 진전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원은 정부가 IRM 절차를 준수하고 공약 수행 및 실행 과정의 소통에 관심을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기존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정보 공개 청구의 이해관계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선도적인 전자 정부 및 이와 유사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확대 및 데이터세트 추가 공개에만 과도하게 치중하기보다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며 투명성이 확보된 공개 절차의 마련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차 국가 실천 계획 공개 시점에 이해관계자는 2013년 정보공개법에 기반하여 실천 면에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 **국가 실천 계획 초안 및 실행 전반에 시민 사회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포럼, 회의, 협의 위원회를 개최해 정부 3.0 혁신을 논의했음에도 이중 한국의 실질적인 OGP 공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제는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한국 관계자 대부분이 포럼에 초청받아 공직자와 독립 전문가의

발표를 들었을 뿐 협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으므로, 연구원은 행정자치부가 유력 관련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와 연계할 것을 권고한다.

- **막연한 발전이 아닌 개별적이고 측정 가능한 공약을 작성해야 한다.** 1, 2차 실천 계획에서 대다수 공약이 측정하기 어렵고, 주요 행위자를 명시하지 않으며, 기존 관행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부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모호한 전문 용어로 이뤄져 있다. 적절히 작성된 공약은 행위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부제를 달아 정리하며 2년간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5대 '스마트' 권고사항	
1. OGP를 위한 관계자 포럼 개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괄	국가 실천 계획의 초안 및 실행 단계에 이러한 활동을 동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기업 및 기타 다양한 영역의 오픈 데이터 관계자 및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을 포함해 이해관계자를 구성해야 한다.
2. 한국 열린 정부 핵심 과제 파악 및 처리	정부 3.0 공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영역을 적절히 포함할 수 있다. 1) 명예훼손법, 국가보안법, 국가 기밀 및 국정원의 향후 방향 2) 정보 자유법상 정보 공개에 대한 모호한 규정 및 3) 참여,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OGP 가치에 대응하는 전자 정부 프로그램.
3. IRM 절차 참여	일반적인 OGP 회원 지침을 준수하며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4. 더욱 진취적이고 측정 가능한 공약 수립	현행 정책보다 더욱 진취적인 공약을 수립한다.
5. 국가별 실천 계획 명시	한국 및 국가적 이해관계자 간에 배포 및 홍보할 목적으로 실천 계획을 명시한다.

8. 방법론 및 출처

정부 자체 평가의 보완 자료로서, 독립 IRM 평가보고서는 가급적 OGP 회원국 출신의 명망 있는 거버넌스 연구자들이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제프리 케인(주 저자)

정다예(보조)

이정훈(보조)

박나리(보고서 번역)

위 전문 연구원들은 문헌 조사 및 해당 국가 OGP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종합한 자료를 기반으로 OGP 보고서 설문지와 가이드라인¹을 활용한다. 보고서는 작성 이후 OGP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 소규모 국제 전문가 패널과 공유하며, 연구 및 실사의 최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동료 평가를 거친다.

OGP 실천 계획의 진행 상황 분석은 면담, 문헌 조사, 비정부 관계자 회의에서 나온 피드백을 종합해 이뤄지며, IRM 보고서는 정부의 자체 평가 보고서 결과 및 여타 시민사회단체, 민간 부문, 국제 기구 등에서 실시한 진행도 평가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각국의 평가자들은 관계자 협의를 실시해 상황 별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산 및 일정의 제약으로 인해 IRM이 이해관계자와 영향을 받는 당사자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IRM은 방법적 투명성을 높이려고 힘쓰고 있으며, 본 연구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 과정을 가능한 한 공개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 장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정부 또는 비정부 정보 제공자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환경의 국가에서는 IRM이 정보 제공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나아가 연구 방법의 불가피한 한계로 인해 각 회원국의 문서 공개 초안에 대한 논평이 강조된다.

표적집단 면담

각 국가의 연구원은 공개 정보 수집 포럼을 1회 이상 실시한다. 기존 절차에 이미 참여 중인 '유력 관련자' 이외의 관계자를 초빙해 실시해야 한다. 더욱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계자의 조언을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서면 응답, 추적 면담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공약에 자체 평가 보고서나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공약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연구원은 담당 기관과 개별 면담을 수행한다

OGP IRM 지원팀과 한국 연구원은 2015년 12월 1일 이메일로 공약 완료에 대한 정부의 보충 정보를 요청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 7일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1차 관계자 포럼

한국 서울

1차 관계자 포럼은 2015년 9월 23일 서울 시청 인근 협업 공간에서 개최됐으며 표적집단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명단: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선임 정책 위원.

곽영아, 독일 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전지은, 인디랩 설립자 겸 CEO.

김보람, Open Knowledge 현지 담당자.

제임스 G. 김, LiSt Inc. 전략기획 책임자.

임영재, 코드나무 및 Code for Seoul 활동가.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 교수 및 오픈넷코리아 대표.

박지원, 오픈넷코리아.

제프리 케인, IRM 연구원.

정다예, IRM 보조 연구원.

요약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관계자 10인과 IRM 연구원 2인이 참석해 2시간 30분간 회의를 통해 각 공약과 실천 계획의 전반적인 심도, 연관성, 진취적 태도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자는 IRM이 보유한 투명성, 부패 척결, 오픈 데이터/빅 데이터, 시민 참여 및 관련 분야의 10여 개 단체 풀에서 선정됐다. IRM 연구원은 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환경, 노동, 빈곤 관련 단체와 열린 정부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과도 연락을 취했으나, 이들은 포럼 참석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보조 연구원이 OGP 및 IRM을 소개하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 후 주임 연구원이 한국 내 IRM 조사 현황에 대한 간단한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를 포럼에

초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고, 행정자치부는 이전 조사 기간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부족한 것에 대한 서신을 받았으며 2차 조사 기간 중에도 IRM 절차에서 계속 이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러한 당면과제를 고려할 때, 시민 사회 참여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태도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관계자 포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해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오픈 데이터에 대해 강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데이터 속도와 하이테크 인프라가 강력하고 투명한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2013년 10월에 열린 포럼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행정자치부의 "열린 정부"에 대한 이해가 OGP 가치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정부 3.0의 최종 목표가 민간 기업 지원과 성장 촉진에 중점을 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정부 3.0 포럼에 초청받은 반면, 공약 초안 및 실행에 대한 협의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는 전무했으며, 이는 연구원의 시각에서 적신호였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정부가 정부 자신의 역할을 OGP 관련 활동 창출 및 의사 결정에 시민 사회를 개입시키는 것이 아닌 시민 사회에 완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간혹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나 진행 중인 과업이 배타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은 공약 1a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적용되는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고충이 한동안 명확한 결론 없이 여러 부서로 이관되었음을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우수하나 고충 및 민원을 담당하고자 하는 부서가 드물어 문제가 다른 부서로 미뤄진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1차 기간과 마찬가지로, 관계자들은 정부가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민원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동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정부가 정부 3.0 통계를 부풀리고자 이러한 정보 공개의 일환으로 지방 정부의 데이터세트를 부적절하게 배정하고 잡다한 정보를 지나치게 공개한 것이 아닌지 우려했다. 관계자들이 정보 공개 청구로 기본 정보 공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부 관행이 여전히 배타적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예를 들어 Indi Lab CEO 전지은의 공적개발원조(ODA) 기본 정보 공개 청구는 '외교 기밀'이라는 사유로 거부됐다. data.go.kr과 같은 사이트의 검색 용이성, 조직 및 사용자 친화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포럼은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려면 앞으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확신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오픈넷코리아 대표

박경신은 지난 이명박 정권(1차 실행 기간)에서 주요 의제가 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공직자의 명예훼손법 이용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List Inc. 전략기획 책임자 김보람은 정부가 개방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각이 변화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2차 관계자 포럼

대한민국 서울(웨비나)

2015년 9월 25일 웨비나 형태로 2차 관계자 포럼을 가졌으며, 표적집단 형식으로 진행했다. 관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은 1차 포럼에 참여했으므로 2차 포럼은 정부 담당자 3인 및 보조 연구원의 4인으로 구성됐다. (수석 연구원은 당시 한국에 없었으며 IRM 절차에서 정부 정보를 얻기 위한 최종 시도였던 만큼 회의 일정이 촉박하게 정해졌다.)

참석자 명단:

구민주, 행정자치부 행정한류담당관 행정사무관

전예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박지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다예, IRM 보조 연구원.

정부 관계자만 참석한 결과 기준에 맞게 구성된 관계자 포럼은 아니었으나, 2015년 10월 1일에 종료하는 IRM 초안 기한 이전에 정부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최종 기회였다. 보조 연구원의 행정자치부가 1차 기간 중 서신을 받았으며 2차 기간 중에도 서신이 필요하며, 소위원회가 만나 한국의 OGP 회원 자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으로 자리를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 구민주는 자신의 직무가 OGP 초안 및 실행의 조정이 아니라 국제 조직과 행정자치부 간 영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임을 언급했다. 조사 기간 중 OGP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을 언급했다. 구민주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상 수많은 데이터 관련 공약을 처리하고 있는 부서는 행정자치부의 창조 경제 계획하의 정부 3.0 부서이나 언어 문제로 인하여 대응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소속인 두 번째 정부 관계자 전예은은 해당 부서에서 데이터 관련 공약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기꺼이 작성할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국가 데이터세트 규모에 지방 정부의 파일이 포함돼 있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전예은은 지방 정부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단일한 데이터세트로 통합하는 작업을 개인적으로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의 정부 담당자 박지혜는 정부가 메타데이터, 인덱싱, 검색이 용이한 환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추세를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까지 행정자치부가 25개 영역에서 추가로 정보를 공개할 것이며 예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2015년 12월 3일.

이지수, 변호사 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2015년 11월 21일.

김용철, 내부고발자 겸 *삼성을 생각한다* 저자, 2015년 9월 20일.

노회찬, 전 국회의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 2015년 9월 15일.

공정옥, 의사 겸 활동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2015년 9월 20일.

이용한, 원코리아 활동가, 2015년 9월 10일.

국민연금공단 전 최고정보통신책임자, 2015년 8월 31일. (익명 요청)

국제인권감시기구 연구원, 2015년 7월 15일.

마이클 브린, *한국인을 말하다* 저자 및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즈컨설턴츠 대표, 2015년 4월 20일.

이태훈, 코리아옵저버 CEO, 2015년 4월 12일.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2015년 3월 15일.

구세웅, *코리아 익스포제* 편집장, 2015년 3월 9일.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 교수 및 오픈넷코리아 대표; 김가연, 오픈넷 코리아 자문변호사, 2015년 2월 26일. (연구자 주: 조사 기간 중 박경신씨와 면담과 연락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가장 심층적인 면담이었다.)

신은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저자로 2015년 1월 한국에서 추방, 2015년 1월 13일.

피터 데일리, 한국 종교 전문가로 목회자가 강간으로 복역 중인 교회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태, 2014년 11월 21, 2015년 1월 15일.

다니엘 튜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및 *North Korea Confidential*, 저자, 2014년 1월 5일.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2014년 10월 8일.

정한영(성호), 자칭 '일베숫컷종정' 2014년 10월 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14년 9월 20일.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를 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일부 및 해당 문제에 독립적으로 연대하는 시위자들, 2014년 5월-10월. 이중 다수가 익명을 요청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2013년 10월 15일. (연구자 주: 이 면담은 김재연이 국회의원이던 1차 기간 중 실시되었으나 해당 정당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로 해산됨에 따라 2차 기간 중에도 면담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2차 기간 중의 정당 해산 이후 2차 회의를 위해 연락하고자 했으나 접촉하지 못했다.)

보충 정보

행정자치부에 대한 회의 요청, 실행 요청, 정보 요청 및 OGP 및 IRM 절차 안내 시도 목록

(연구자 주: OGP IRM 지원팀이 행정자치부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한 내용은 이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사 기간 중 IRM 기한 종료 이전인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연구자가 시도한 주요 연락만을 포함했다. 이 기한 종료 이후 연구자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2015년 10월 1일 정부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공받았으며 2015년 12월 7일 추가 정보 문서를 받았다.)

2015년 9월 21일

2015년 9월 12일

2015년 9월 7일

2015년 9월 2일(행정자치부에서 다음날 회의를 갖고자 했으나 연구자가 서울에 없었으며 준비 시간도 부족했음)

2015년 8월 26일

2015년 8월 10일

2015년 7월 29일

2015년 7월 28일

2015년 7월 14일

2015년 7월 3일

2015년 2월 5일

2015년 1월 9일~1월 30일(정기적 연락 기간, 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OGP 및 IRM 절차 설명. 담당자가 얼마 후 이동함)

2014년 12월 11일

C. 설문조사 기반 자료(선택사항)

2015년 9월 2일 포럼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원하는 경우 한국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참석자들은 설문에서 각 공약의 문구, 실행, 연관성 및 진취성에 대해 1점~5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평가 이유를 기재하도록 요청 받았다. 참석자 10인 중 3인이 설문조사에 답변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본 보고서 확인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IRM(독립 보고 메커니즘)이란?

정부, 시민사회단체, 민간 부문이 정부의 OGP 실천 계획의 계발 및 구현을 2년 단위로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투명성, 참여도, 책임성, 사회과학 연구 방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전문가 패널이 조사 설계 및 보고서의 품질 관리를 맡고 있다.

국제 전문가 패널의 현재 회원은 아래와 같다.

- Anuradha Joshi
- Debbie Budlender
- Ernesto Velasco-Sánchez
- Gerardo Munck
- Hazel Feigenblatt
- Hille Hinsberg
- Jonathan Fox
- Liliane Corrêa de Oliveira Klaus
- Rosemary McGee
- Yamini Aiyar

워싱턴 D.C.에 위치한 소규모 기관으로 IRM 절차를 통해 연구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보고서를 관장한다. 보고서와 관련한 지적 및 문의사항은 irm@opengovpartnership.org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¹ 전체 연구 지침은 다음 링크의 IRM 절차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opengovpartnership.org/about/about-irm>.